

KINU 정책연구 시리즈 11-01

재스민 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 박영호 · 박형중 · 정영태 · 조민 · 홍우택

KINU 정책연구시리즈 11-01

재스민 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재스민 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인 쇄 2011년 7월

발 행 2011년 7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통일정책연구센터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3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예원기획 (T. 02-745-8090)

인 쇄 처 (주)예원기획

ISBN 978-89-8479-601-0 93340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11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734-6818 · 사무실: 394-0337

재스민 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개 관	1
1. 시민봉기의 배경 및 과정	3
2. 전 망	13
II. 주요국 사태 분석	17
1. 튀니지	19
2. 이집트	36
3. 리비아	58
III. 북한의 대응과 시사점	89
1. 북한의 대응	91
2. 시사점	94
부록 I 북아프리카·중동지역 시위 유형 및 전개과정	107
부록 II 주요 국가의 사태 전개 일지	110
최근 발간자료 안내	149

표·그림 목차

[표 1]	튀니지의 정치적 변화	23
[표 2]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의 사례 비교	87
[그림 1]	튀니지 주요 경제 지표 (1980-2010)	21
[그림 2]	튀니지의 노동가능인구 구성 변화 (1980-2009)	22
[그림 3]	튀니지의 통신수단 변화 (1980-2009)	31

I. 개 관

1. 시민봉기의 배경 및 과정

가. 배경

■ 정치적 배경 : ‘빵과 복종’의 계약관계 해체

- 북아프리카·중동 산유국들은 오일 달러로 지금까지 최저 생존을 보장해 왔으나 최근 30%를 상회하는 청년실업, 식품·생필품의 물가 폭등 등 경제상황 악화로 ‘빵과 복종(자유 및 기본권 유보)’의 계약관계가 해체되는 상황을 맞이하였음.

- 장기 집권 및 세습 시도
 - 이집트, 예멘, 리비아의 장기집권과 권력세습(시리아 2000년 세습 단행, 이집트 및 리비아 세습 추진)

- 정치적 부패와 탄압에 대한 불만 폭발
 - 집권세력의 경제적 이권 독점, 관료부패와 폭력, 비상계엄, 정당 정치 제한, 언론통제 등
 - 기본권 회복과 생존권 보장 요구의 폭발

- 시민들이 한편으로는 정치 자유, 정권 교체, 부패 종식, 보안기관 해체 등을 요구하고, 다른 편으로는 고용기회 확대, 적절한 임금 등을 요구함.

■ 경제적 배경 : 높은 실업률과 경제적 침체

- 전 세계 평균을 훨씬 웃도는 실업률, 높은 청년실업률, 유능한 전문 인력의 해외 유출, 이주율 증가, 줄지 않는 문맹 인구, 거대한 빈민가, 어떤 사회보장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대다수 서민층의 미미한 구매력, 일반화된 부패와 국민의 사기 침체, 중산층의 환멸, 민간 기업들의 무질서한 경영 등이 튀니지의 현실임.
 - 최근 몇 년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과 국제금융기구들 및 유럽 연합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개혁은 사회적·경제적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 사회적 배경 : 낮은 사회유동성과 전통 지배 사회에 대한 반감·거부

- 왕족, 군부의 기득권 유지에 의한 신분 변동의 한계
- 부족, 가문, 연고에 의한 신분상승구조에 대한 좌절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한 조직적 소통 확산과 위키리크스 폭로

- 튀니지(인구 1천 40만, 25세 이하 연령층 60%)의 대학졸업 학력의 노점상 무함마드 부아지지(26)의 분신자살이 시민봉기의 도화선이었으며, 분신 동영상 확산과 SNS에 의해 ‘재스민 혁명’이 북아프리카를 휩쓸었음.
 - 분신자살에 대한 정신적·문화적 충격이 견잡을 수 없는 봉기로 폭발

-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지도자에 대한 급격한 신뢰 상실과 함께 지배층의 타락한 2세들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폭발함.
- 시위대는 평화적인 시위에 의해 철용성 같았던 독재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증명함.
 - 아랍권 거리의 시민들은 평화적이며 비폭력적인 시위를 통해 그들의 존엄과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 획득

나. 확산 과정

- 현재 북아프리카·중동 지역 22개 국가(공화제, 절대왕정/세습군주제, 입헌군주제)의 시민봉기와 민주화의 향방은 각국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 민중의 조직적 저항력, 그리고 정권 측의 대응력 등의 수준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귀결될 것임.

(1) 독재자 퇴진, 민주화 진행 유형 : 튀니지, 이집트

- 튀니지, 벤 알리 망명(1.14)
- 이집트, 호스니 무바라크 하야(2.11)

(2) 독재정권 붕괴 임박 : 예멘, 시리아 등

[예멘]

- 33년 장기집권 중인 살레 대통령은 수도 사나에서 시위 군중의 즉각 퇴진 압력을 받는 한편, 이웃 국가들의 지지 상실로 퇴진이 불가피한 상태임.

- 2,300만 인구 중 30세 이하 인구가 72%를 차지하는 가운데 35%의 실업률, 국민 45% 극빈층의 아랍 최빈국
 - 살레 정권의 붕괴 시, 알-카에다 세력 확산과 대 테러리즘 공조 균열이 우려되나 예멘인들의 민심이 크게 이반된 상황에서 미국과 중동국가들은 안정적인 권력이양을 통한 살레 정권의 퇴진 유도 분위기 형성
- 2013년 임기 만료 예정인 살레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는 3개월 가까이 진행되어 왔으며, 140여 명이 강경 진압에 의해 희생당했음.
 - 5월 초 현재, 살레 대통령의 퇴진을 전제로 한 걸프협력회의(GCC)의 중재안 수용을 둘러싸고 시위대와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살레측과 야권은 중재안 타결을 촉구한 미국의 반응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혼돈과 유혈사태는 지속 중

[시리아]

- 1970년 무혈 쿠데타로 권력을 쥔 하페즈 아사드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 바샤르 알-아사드가 권력을 승계해 11년째 시리아를 통치하고 있음.
- 3월 15일부터 시작된 시위대의 퇴진 요구에 맞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은 개혁안 제시와 함께 강경진압의 강온 양면 대응을 실시하고 있음.

- 국제사회는 아사드 대통령의 시위대 강경 진압을 비난함과 동시에 개혁 약속의 이행을 촉구

- 7월 중순 현재,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정부 당국의 발포로 1,400명 이상이 희생되었음.

[알제리]

- 튀니지와 이집트의 정권 붕괴에 자극받아, 압델아지즈 부테플리카 (1999년~현재) 정권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전개되면서 곳곳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와 노동자들의 파업, 분신자살 등이 이어졌음.
- 알제리 정부는 19년 동안 이어져 온 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해제하고 기업 장기대출 자금 지원, 농업분야 저금리 대출 지원 등 각종 유화책을 내놓으며 민심을 달래려 하고 있음.
 - 시위대는 정치와 언론, 사회적 활동의 자유 보장 등 추가 조치를 촉구하고 있으나, 3월 이후 민주화 시위는 소강상태에 접어든 국면임.

(3) 개혁조치 추진 및 민주적 방식 수용 : 모로코, 요르단, 오만 등

[모로코]

- 예언자의 직계 혈통이라는 정통성, 국왕에 대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존경이 유지되고 있는 모로코 왕정은 즉각적인 개혁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왕정의 붕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됨.



- 부패한 관료주의 개혁 추진, 정치적 반대세력 인정, 실업난 해소 노력 등

[요르단]

- 요르단 왕 압둘라 2세는 지난 2월 야권 인사를 포함한 새 행정부를 수립하고 일련의 정치 개혁을 약속했으며, 이에 국민들은 새 정부에 실질적이고 빠른 개혁 법안 제정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음.
- 경제 위기와 더불어 청년실업이 극심한 상황에서 압둘라왕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경제 개혁 의지를 밝혔지만, 정부의 지체 없는 개혁 이행을 촉구하는 민중의 요구는 가라앉지 않고 있음.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 이들 나라들은 제도적 개선·개혁 추진으로 안정적이며, 여성참정권을 인정하고 있음.

[바레인]

- 왕정국가(인구 73만, 70% 시아파)로 수니파인 알 칼리파 가문의 40년째 권력 장악에 반발한 ‘왕정 타도, 국왕 퇴진’ 요구에 총 308명의 정치범 석방과 함께 권력 분점이 추진되고 있음.
- 바레인은 오일 머니로 1인당 GDP 2만 7천 달러의 부국으로, 튀니지와 이집트의 높은 실업률·빈곤·독재체제에서 기인한 민주화 혁명과 차별성 존재

- 미 제5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바레인인 페르시아만 수호와 함께 이란 견제의 전략적 요충지임.
 - 바레인 시위가 사우디까지 번져 정권이 교체될 경우, 미국의 중동정책은 뿌리부터 흔들려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 패권의 심각한 위기 초래 가능
 - 이에 사우디는 바레인 시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개입 단행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는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중동 지역 친미 벨트의 핵심이자 미국의 중동 전략의 파트너 국가라는 점에서, 미국은 시민봉기로부터 사우디왕정을 보호하려 할 것임.
- 시민들은 시아파에 대한 차별정책 철폐, 여성 인권 확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직접선거 도입 등 정치개혁, 시아파 정치범 수감자 석방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시아파 중심으로 2월 말부터 100명 이상의 규모로 시위가 진행 중
 - 사우디 정부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왕은 약 40조에 달하는 민생지원안 발표로 무마 시도
- 사우디 왕정이 시민봉기로 위기에 처할 것인지 여부가 중동지역 정치변동 최대의 관심사항이나, 미국의 대중동 정책과 깊이 결부된 사우디 왕정의 민주적 개혁에 대한 기대는 미미함.

[걸프협력협의회(GCC)와 왕정 보호]

- 걸프협력협의회(GCC: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등, 아라비아반도 산유국 6개 왕정국가) 협조체제는 아라비아반도의 시민봉기로부터 왕정을 확고히 유지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GCC는 역내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강온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재정지원: 실업난 해소와 민심 진정을 지원책으로 바레인과 오만에 각각 100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지원키로 합의
 - 무력진압: 바레인 시위에 사우디 병력 1,000명과 UAE 경찰 500명 파견(3.15)에 의해 왕권 보호

- 그러나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가 고조될수록 왕권 약화는 불가피함.
 - 모로코, 요르단, 바레인, 사우디 등의 국왕들은 의회해산, 내각 총사퇴 등을 통한 개혁을 약속함으로써 당장 왕권이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정치개혁 불가피

다. ‘아랍의 봄’의 좌절의 역사

- 북아프리카·중동 지역의 22개국 아랍권은 서구와 미국 주도의 국제 정치의 피동적 객체로 전락하면서 집권세력의 억압적 통치체제 속에서 아랍권 민중의 역사는 좌절과 왜곡의 시련을 겪고 있음.
 - 초기 반제·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아랍의 새로운 태동 움직임이 좌절되자 곧 이슬람 복고주의로 회귀되면서 왕정과 독재체제가 지금까지 지속 중

- 이런 상황에서 아랍권의 시민봉기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억압받는 민중의 절규와 몸부림

(1) 반제·민족주의 이데올로기

- 1956년, 반제국주의자이자 제3세계주의자였던 이집트의 가말 압델 나세르의 영국 식민군대에 대한 승리를 계기로 ‘아랍의 봄’이 도래함.
-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나세르 주도의 이집트·시리아·요르단 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함으로써 아랍의 미래가 봉합됨.
- 1975~90년, 레바논은 외국 군대와 무장 민병대의 범람, 이스라엘에 의한 점령 등으로 혼란과 폭력 상태에 빠졌으며, 뒤이어 알제리와 이라크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함.

※ 아랍 민중의 ‘레바논화’ 또는 ‘이라크화’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분위기 상황을 빌미로 집권세력은 정치적 안정의 보장세력으로 자처하면서 더욱 권위적·강압적 체제로 변질되었음.

(2) 이슬람 정체성에 기초한 이데올로기

- 이슬람 사회의 반제국주의적·세속주의적 민족주의가 약화되면서 ‘이슬람’(이슬람은 아랍어로 ‘복종’을 뜻함) 정체성에 바탕을 둔 이데올로기가 대두함.
- (a) ‘살라피즘’ 및 ‘와하비즘’ 등의 이슬람 복고주의 등장

- ‘살라피즘’은 걸프만 석유왕국들의 이념으로 엄격하고 급격한 초기 이슬람으로 돌아가자는 복고주의, 지하드주의 등의 모태
- 특히, ‘와하비즘’은 이슬람교의 한 종파인 와하브파를 신봉하는 이슬람 복고주의이자 사우디아라비아의 건국이념
- 이러한 탈세속적인 이슬람 복고주의 등장으로 아랍민족주의는 해악으로 비난받았고, 범이슬람 연대가 대안으로 부각

※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 주도의 이슬람회의기구(OIC)는 비동맹국운동과 분쟁으로 무력해진 아랍연맹(LAS)을 압도함. 1970년 말,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은 지하드(성전)주의를 내세워 아프가니스탄에서 젊은이들을 소련군에 대항케 했으며, 이후 지하드주의는 보스니아, 체첸, 코카서스로 전파되었음.

(b) 이란의 혁명사상은 이슬람에 기초한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아랍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

- 이란 혁명사상은 시아파 색채를 띠고 근대적 입헌주의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와하비즘과 상당히 다른 사상이나, 그 이전 시기의 반제국주의의 계승 및 사회주의적 지향을 보이면서 강력한 이슬람 색채 속에 신랄한 반시오니즘 특징 내포
- 1980년대 중동 지역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상대로 시작한 전쟁은 오늘날까지 아랍권의 향배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으며, 그 후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서방연합군의 격퇴,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연결

※ 종교적 일체감이 퇴화되면서 중동 아랍권 국가들 사이에 강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는 암울하고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대규모 시민봉기가 발생한 상황임.

2. 전망

■ 시민봉기의 구심점 부재

- 북아프리카·중동의 시민봉기는 주도세력의 부재로 사태 추이의 미래 전망이 불확실함.
 - 대안세력의 부재 속에서 경제문제 해결과 정치적 민주화를 갈망하는 ‘영 파워’(young power)의 역할이 크게 부각
- EU, 미국, 아랍국가 등 국제사회는 북아프리카·중동 사태에 대해 각국의 국가이익의 입장에서 접근함으로써 시민봉기는 각국마다 대내외적 조건과 국제사회와의 관계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됨.
-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지에서 정권 붕괴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의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시민봉기가 지속 중이지만 구 집권세력의 복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정치 불안과 경제상황 악화는 과거체제로의 회귀 분위기 조장
- 왕정국가를 비롯한 독재정권의 언론 통제, 무력 탄압, 무마 전략 등

이 실시되고 있으며 시민봉기의 구심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시민봉기가 소강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

■ 아랍 세계의 불투명하고 험난한 미래

- 내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아랍 세계가 되찾은 자유와 존엄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할 것임.
- 탄압은 가혹해질 것이며, 리비아 사태에서 보듯이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외부 간섭(미국·유럽 또는 산유국 왕정 국가 등)이 점차 강화될 수 있음.

■ 아랍식 민주주의의 전망

- 아랍 시민봉기는 ‘서구식 민주주의’ 방향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며, 아랍식 민주주의로의 모색을 전망해 볼 수 있음.
- 이슬람 가치의 바탕 위에서 반(反)서방이 아닌 서구와 공조·협력하는 모델을 지향할 가능성이 큼.
 - 정치적 민주화와 분배구조의 형평성 회복이 과제
 - 군부의 정치적 위상과 경제적 특권이 유지될 가능성 농후
- 터키, 말레이시아, 이란 모델 가운데 ‘터키식 모델’이 가장 바람직함.
 - 이란의 신정정치 모델은 아랍 민중의 지지확보 어려움
 - 말레이시아 모델은 두 부족의 분점(分店)에 의한 조화에 기반하여, 법·제도적으로는 이슬람 국가이나 여성의 정치적·사회적 진출도 활발

- 터키의 집권 ‘정의발전당’은 EU 가입을 제창하고 있으며 터키는 서구 자유민주주의체제에 가장 근접한 정치행태를 가진 국가
- 북아프리카·중동 지역의 시민봉기 과정에서 알-카에다를 비롯한 대중적 지지기반이 없는 원리주의적 정치세력의 영향력은 거의 전무한 상태임.
 - 아랍 세계의 침묵해왔던 주류(主流)공동체의 바람과 기대를 이해할 필요
- 미국·서방의 외부 세력과 북아프리카·중동 지역의 독재정권의 적대적·비적대적 공생관계의 해체가 아랍 민주화의 성패를 가늠함.
- 미국·서방사회가 원하는 방향과 아랍 세계가 나아가는 방향과의 조화가 모색되어야 함.

Ⅱ. 주요국 사태 분석

1. 튀니지

가. 시민들의 저항

- ‘재스민 혁명’이라고도 불리는 튀니지 민주화 시위는 ‘굶주림의 혁명 (hunger revolution)’이었다고 표현될 정도로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시민혁명으로 이어져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경우임.
 - 튀니지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비교적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적고 관광산업이 발달하여 인접 국가들에 비해 정치와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을 구가하고 있었으므로 이번의 소요는 매우 충격
 - 이것은 이러한 ‘안정’이 지배계층에 한정되고 계층간 격차가 극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장기집권과 부정부패, 고물가, 고실업률 등 만성적인 문제와 더불어 서민의 생계에는 무관심한 지배층에 대한 분노가 튀니지 시민혁명의 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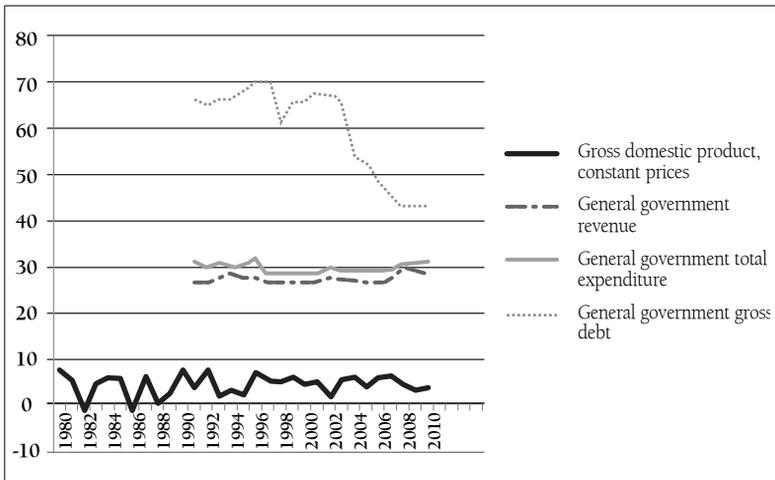
- 튀니지 시민혁명의 실질적인 기폭제가 된 것은 한 과일 노점상의 분신자살이었음.
 - 튀니지 중부 부지드 지역에서 무허가로 과일 노점상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으로 과일을 모두 빼앗긴 대졸학력의 모하메드 부아지지 (26)가 2010년 12월 17일 분신자살을 하면서 시민혁명 촉발
 - 부아지지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어려운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과일노점상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고학력의 청년들이 부아지지와 같은 상황에 처했었기 때문에 이들의 불만이 시위가 확대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튀니지는 인구의 60% 이상이 25세 미만이고, 매년 대학을 졸업하는 수천 명의 청년들이 일자

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

- 처음 사건이 일어난 부지드는 수도인 튀니스에서 남서쪽으로 200km 가량 떨어진 지방 소도시였으나 1월 5일 결국 부아지지가 사망하면서 시위가 더욱 확산되어 남중부, 나아가 튀니스까지 확대
 - 한 청년의 분신자살 사건은 식료품값 인상과 최고조에 달해있는 실업난과 겹쳐 시민들의 저항열기에 기름을 끼얹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후 시민들의 시위는 독재타도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확대
- 한 청년의 자살사건이 전국적으로 퍼져 시민혁명으로 이어진 배경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역할이 지대하였음.
- 튀니지 정부는 시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였으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블로그를 통해 부아지지의 자살소식과 이후 시위 현장의 사진이나 소식이 튀니지 전 지역으로 확산
 - 청년의 자살 시도 이후 부지드 지역에서는 높은 실업률에 항의하는 시위로 이어졌으며, 이후 튀니지 전국에서 부정부패와 물가 폭등에 항의하는 시위로 확산
- 시위사태의 근저에는 청년실업난과 날로 심화되는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이 잠재해 있었음.
- 벤 알리 전 대통령은 2009년 5선 연임에 성공하였으나 장기적인 독재로 인한 국민의 불만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그리고 경제적 낙후와 부패, 높은 실업률, 물가 폭등과 식량난이 더해져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결국 커다란 저항에 직면
 - 튀니지는 상공업 중심인 해안지방 중심으로 경제가 형성되어 내

- 륙지방과의 심각한 지역 불균형이 존재
- 그러나 지역적 격차를 메우기엔 다른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 국가들과 달리 석유자원이 없어 재원이 부족하였으므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
 - 더욱이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럽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휘청거리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
 - 이번 중동 위기의 한 원인으로 산유국들의 식량과 석유 등 생필품에 대한 보조금 삭감이 지적되고 있는데, 산유국이긴 하나 생산되는 석유의 양이 미미한 튀니지의 경우에는 보조금 삭감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곤란
 - 다음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튀니지의 정부총지출이 큰 변화 없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보조금이 크게 삭감되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

[그림 1] 튀니지 주요 경제 지표(198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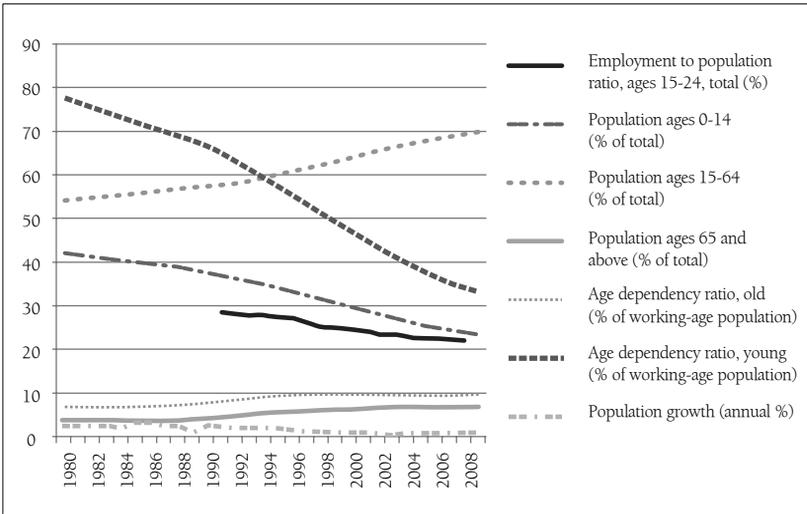


*자료: IMF

○ 튀니지 시민혁명을 촉발한 경제적 문제는 무엇보다도 청년 실업문제였음.

- 현재 튀니지의 공식실업률은 14%이지만, 실제 지방과 청년층의 실업률은 40%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대졸자 등 고학력자의 만성실업이 큰 사회문제
- 아래 [그림 2]를 보면 전체 인구증가율은 높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미미하긴 하지만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반면,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노동인구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결과는 실업 압력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

[그림 2] 튀니지의 노동가능인구 구성 변화 (1980-2009)



*자료: World Bank

○ 경제적 빈곤과 더불어 또 다른 혁명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독재와 언론탄압으로 인한 정치적 권리의 박탈임.

- 벤 알리 튀니지 전 대통령은 1987년 쿠데타로 집권한 후 민주주의의 점진적 도입을 위해 종신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없애고 연임을 2회로 제한, 취약계층을 위한 기금과 사회보장 시스템 도입 등 개혁적인 정책 채택
- 그러나 벤 알리 전 대통령은 이러한 초기의 모습과 달리 이후 정권 연장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여 연임을 거듭 연장하였으며 이를 위해 군부를 장악하고 야당을 탄압하며 언론 통제
- 지난 2009년 5선에 성공할 당시 벤 알리 대통령의 득표율은 89.62%로 이러한 절대적인 지지율은 튀니지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
- 프리덤하우스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에 관한 지표를 보면 튀니지는 2008년 이후 정치적 권리 부문에서 최하의 등급인 7등급을 기록
- 프리덤하우스의 정치적 권리는 선거과정, 정치적 다원주의, 참여, 그리고 정부기능을 측정하는 것인데, 아래 [표 1]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정치참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부가 부패 등의 이유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표현

[표 1] 튀니지의 정치적 변화

Year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Political Rights	6	6	6	6	6	6	7	7	7
Civil Liberties	5	5	5	5	5	5	5	5	5
Status	NF								

*자료: 프리덤하우스

- 전국에서 계속된 시위로 인해 벤 알리 튀니지 대통령은 2014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선언하고 내각을 해산한 뒤 6개월 내에 총선

을 실시하기로 밝혔음.

- 하지만 그의 하야를 촉구하는 격화된 시위가 가라앉지 않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푸아드 메바자 국회의장이 직위를 대행하는 체제에 돌입
- 벤 알리의 하야 직후 모하메드 간누시 튀니지 총리는 여·야 과도통합정부를 구성하고 과도정부에서 과거 친정부 성향의 정당들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후 발표된 과도정부 내각에 몇몇 야당인사들을 제외하고는 주요 요직에 구 정권의 인사들이 취임되자 시민들의 반발 재발
- 이에 과도정부는 정치범 사면, 언론자유 증진 등 각종 개혁조치를 발표하였으나 별다른 효과 없이 시위는 더욱 확산
- 시민들의 항의시위가 격화되자 결국 집권 여당인 입헌민주연합(RCD)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기까지 이르렀으나, 구체제의 인사들이 과도정부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어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지속 중

○ 현재 튀니지는 과도정부의 구성에 불만을 품은 국민이 연일 시위에 가담하는 한편, 정부를 지지하는 시위대들도 등장하면서 시민세력 내에도 분열이 나타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

- 또한 시민혁명의 원인이 되었던 경제난 역시 개선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국은 더욱 불안정해져, 오는 7월 15일로 예정된 선거도 제대로 치러질지 불투명
- 시민혁명 이후 신설된 정당만 50여 개에 이르는 등 여러 정치세력이 난립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안세력이 존재하지 않아 정치적 혼란 지속

- 정국 불안정과 치안 부재가 지속될 경우 외국자본 유출과 관광수입 격감이 초래될 수 있으며, 벤 알리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장악하고 있던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가능성도 존재해 향후 대대적인 민주개혁과 정치적 안정,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룩해야 하는 과제 대두

○ 한 달간의 소요와 유혈사태로 78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나. 엘리트층의 성격과 대응

- 튀니지 정치체제의 특징은 정치권력이 국가원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형태임.
 - 국가원수에게 권력이 집중된 튀니지의 정치체제는 다른 정치적 세력을 허용하지 않은 까닭에 집권여당인 입헌민주연합 외에는 뚜렷한 정치세력 부재
 - 튀니지의 선거에서 득표율을 보면 위와 같은 사실 쉽게 짐작
 - 즉, 튀니지의 선거결과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 왔는데, 집권여당인 입헌민주연합의 득표율은 1989년 99.27%, 1994년 99.91%, 1999년 99.45%, 2004년 94.49%, 그리고 2009년에는 89.62%를 기록
 - 이것은 역시 독재체제인 이집트의 무바라크 정권의 경우 대규모 부정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 반대의견이 표명될 수 있었던 것과 대조
 -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튀니지 정치체제의 특성은 정치적, 경제적 실패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결과 초래

- 튀니지 정치체제는 대통령의 가족, 친족들이 혈연과 혼인을 통해 국가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는 족벌정치의 형태를 띠었음.
 - 위키리스크가 폭로한 미 외교 전문에서 튀니지 주재 미국 대사는 벤 알리 대통령 일가를 마피아에 비유했는데, 이는 대통령 일가가 혈연·혼인 관계를 통해 튀니지 정·재계를 장악하고 있으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기 때문
 - 대통령의 가족과 친족들은 각종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었으며 국가의 권력과 부를 유용, 벤 알리 대통령의 두 번째 부인인 레일라는 1990년대 그의 친정 식구들을 요직에 배치했으며, 기업을 민영화할 때 명목상 가격으로 사들였다가 되팔고,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중개료를 받고 밀수에 관여하는 등 온갖 방법으로 부를 축적
 - 위키리스크를 통해 폭로된 대통령 일가와 친족들의 부패와 호화 생활은 고물가와 고실업에 신음하던 시민들의 불만을 정권퇴진 운동으로 확대시키는 기폭제 요인으로 작용

- 집권여당 외에는 뚜렷한 정치세력이 없었고, 과거 탄압을 피해 튀니지를 떠났던 야당 인사들이 혁명 이후 국내로 복귀하기 시작하였음.
 - 7월로 예정되어 있는 총선거에 과거 추방되었던 인사들이 귀국하여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힘에 따라 정국은 극도로 불투명한 상태
 - 망명 후 귀국한 인사들이 대부분 이슬람주의자로 이들이 향후 정치구도의 재편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외증에 지난 1월 17일 과도정부의 출범에는 내각을 구성하는 총 23명 중 8명이 벤 알리 전 대통령 행정부에 참여하였던 인물로 구성되어 국민들의 반발은 물론 정국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 벤 알리 전 대통령과 대립하였던 야당인사인 나치브 체비 진보민주당 대표, 아흐메드 이브라힘 에타지드당 대표가 각각 지역개발 장관과 교육장관을 맡게 되었으며, 반정부 운동가로 알려진 슬림 아마무가 아동청소년 장관, 그리고 프랑스 식민 지배를 비판한 영화를 제작한 머피다 트라틀리 감독이 문화장관으로 임명
 - 공산당과 이슬람 원리주의 정당인 엔나흐다당은 과도정부의 내각에서 배제
 - 야당 인사가 일부 포함되긴 하였지만 국방, 내무, 외무, 재무 등 주요 직책은 벤 알리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집권여당인 입헌민주연합 인사들이 차지
- 튀니지의 상황은 다른 아랍권 국가들과는 다른 역사적 경험에서도 찾을 수 있음.
- 튀니지는 아랍세계에서 ‘이슬람 세속주의’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반세기 이상 종교와 현실적 가치를 조화시킨 결과
 - 1987년 무혈 쿠데타로 집권한 벤 알리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개혁적인 정책을 실시하여 지지 확대
 - 튀니지는 아랍국가중 유일하게 일부일치제를 법제화하였으며, 이혼 후 여성이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등 여성의 인권 존중
 - 또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득세를 막고자 사회개방정책을 추구하여 서구 문화 유입을 용이하게 한 까닭에 이슬람 사회의 개혁모델로 부각
-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화를 원하기는 하지만 많은 튀니지 국민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를 표방하는 종교지도자들이나 야권이 급부상하는 것을 우려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음.

- 1979년 이란 혁명을 목격한 튀니지 국민들은 종교인들이 튀니지의 정치 불안을 이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표명
 - 튀니지 국민들은 벤 알리 정권의 종교 억제정책으로 인해 서구식 생활방식과 교육에 익숙해져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아랍 국가들과 달리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거부감 존재
 - 이러한 와중에 튀니지의 인권단체와 여성단체는 이슬람 세력을 저지하기 위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
 - 이슬람주의 정당 엔나흐다당의 지도자 라세드 간누시도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과격 이슬람주의와 거리를 두고 중도, 실용노선을 강조
 - 벤 알리의 하야 이후 정치적 망명생활을 하던 이슬람주의자들이 대거 귀국하면서 벤알리 정권이 박해하기 전 가장 강력한 야권 세력이었던 이슬람주의 정당이 새로운 튀니지 정치체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 대두
- 튀니지의 군이 정치적 중립을 선언한 것이 시민혁명의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음.
- 라시드 아마르 군 참모총장이 벤 알리의 시위대에 대한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군부의 정치적 중립을 선언함으로써 피해가 크게 확대되지 않고 혁명에 성공
 - 군부의 지지철회가 벤 알리 대통령의 사임과 해외도피에 결정적인 영향
 - 튀니지의 군부는 이후 혼란을 수습하고 사태의 진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튀니지 군이 과거 쿠데타 전력이 없고 아마르 총장 개인도 정치적 야심이 적다는

- 평가를 받고 있어 쿠데타의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
- 새로운 내각에 군부인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

다. SNS 등 뉴미디어 역할

-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튀니지의 시민혁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동시에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음.
 - 튀니지의 언론은 대부분 국영매체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시위 기간 중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튀니지 정부는 국영매체를 통제
 - 하지만 SNS는 정부에 의해 언론이 차단된 상태에서 시민들 간에 정보를 전파하는 것은 물론 시위를 조직하고 확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
 - SNS는 국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 세력을 결집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였지만, 전 세계로 실시간으로 시위 소식을 전파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얻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
 -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튀니지 정부는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거나 글과 계정을 삭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모든 채널을 막기에는 역부족
- 인터넷과 SNS를 통한 시위정보 확산과정은 다음과 같음.
 - 전국으로 확산된 시위기간 동안 ‘알리’라는 튀니지 시민은 국민들의 민주화 갈망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옮겨왔으며, 이는 시민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밑바탕으로 작용
 - 리나 벤 메니라는 사람은 지난 1월 10일 사망한 시위대 5명의 사진을 충돌사태가 발생한 도시의 이름을 따 ‘레깅의 순교자’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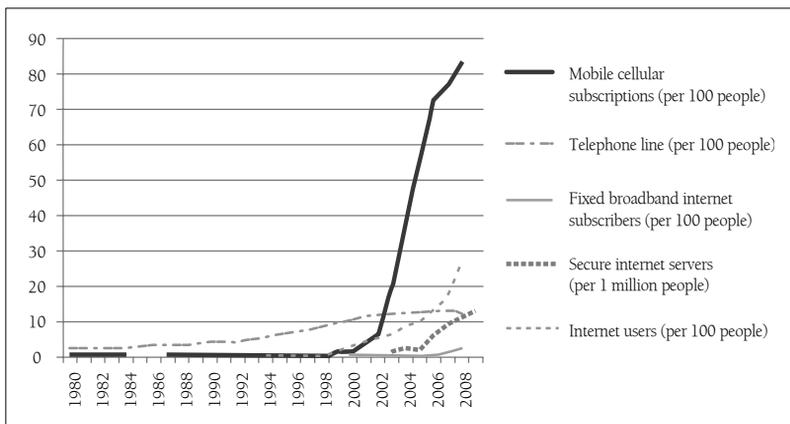
- 1월 12일에는 수백 명의 남녀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는 동영상 이 유튜브에 등장하여 시위 확산에 촉매제 역할
- 가장 유명한 블로그를 운영하는 슬림 아마모우는 2010년 4월 인터넷 매체 ReadWriteWeb에 벤 알리가 조직해 운영하는 튀니지 인터넷 비밀경찰의 실상을 폭로하는 글을 올려 튀니지 시민혁명의 단초를 제공
- 그는 비밀경찰 약 600명이 튀니지 곳곳에서 활동 중이며, 튀니지 국민들의 페이스북이나 지메일 로그인 정보와 비밀번호를 해킹해 검열을 하고 접속을 방해하고 있다고 폭로
- 아마모우는 이 폭로 이후 튀니스의 내무부 청사에 감금되자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인 포스퀘어를 활용해 자신의 감금사실을 전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마모우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온라인 공격을 감행하여 튀니지 경찰 업무가 마비, 이후 아마모우가 과도정부의 청소년문화부 장관으로 발탁된 것은 SNS의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
- 또한 위키리크스에 의해 밝혀진 ‘튀니지의 부패: 네 것은 내 것’이라는 제목의 미국의 2급 비밀 외교전문은 튀니지 민주화 운동가들이 만든 웹사이트 ‘튀니리크스(Tunileaks)’를 통해 퍼져나갔고, 이는 결국 독재타도의 기치 아래 민심을 움직인 동인으로 작용

- 이렇게 튀니지 시민혁명에서 SNS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튀니지 국민들의 인터넷과 SNS 등의 이용률이 높았기 때문임.
- 인구가 1천만 명 남짓인 튀니지는 연 관광객 수가 7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관광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많은 외국

관광객들을 받아들이면서 인접 독재국가들과 달리 통신이 발달하고 모바일 보급이 대규모로 확대

- 이러한 튀니지의 특징은 다른 아랍 국가들과 선명하게 구분되며, 튀니지의 시민혁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데 크게 기여
- 튀니지의 페이스북 가입률이 전체국민의 18%에 달하는 것은 물론 (한국은 7%), 인구 1000여만 명 중 350만 명이 정기적인 인터넷 사용자인 것으로 추계
- 미국 CIA에 의하면, 전체인구 1059만 명인 튀니지에서 975만여대의 휴대전화가 보급되어 있으며 휴대전화 사용에는 거의 제한 없는 것으로 판단
- SNS와 모바일 통신을 활발하게 이용하는 이용자가 젊은 연령층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통신의 발달은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와 맞물려 시위를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

[그림 3] 튀니지의 통신수단 변화 (1980-2009)



*자료: World Bank

라. 국제정치적 역학관계

-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장기독재가 일상화되어 있고 높은 실업률과 빈부격차 등 고질적인 경제문제가 존재하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튀니지와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
 - 대표적으로 무아마르 카다피 원수가 41년째 리비아를 통치하고 있으며, 오마르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은 21년째, 카부스 빈 사이드 알 사이드 오만 국왕은 41년째,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은 30년째, 알리 압둘라 살레 예멘 대통령은 21년째, 압델아지즈 부테플리카 알제리 대통령은 12년째 장기집권, 무함마드 6세 모로코 국왕도 11년간 권좌를 유지
 - 이들 국가들은 경제적으로도 빈곤과 실업, 높은 물가 등 유사한 문제 보유

- 따라서 튀니지와 공통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독재국가들은 튀니지의 시민혁명으로 벤 알리 대통령이 사우디로 도피 한 뒤, 자국 내에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것을 두려워하고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음.
 - 이들 국가들은 튀니지가 민주화의 도미노 현상을 촉발할 것을 경계
 - 지난 1월 19일 아랍 20여개 정상들은 회원국 간 무역과 투자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아랍정상회의에서 의제와 거리가 먼 튀니지 시민혁명 그리고 빈곤퇴치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논의
 - 당시 아랍연맹 사무총장인 아무르 무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아랍 시민들은 유례없는 분노와 좌절감에 빠져있고 우리는 그들을 좌절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아랍의 르네상스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 또한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은 “경제 개발

- 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시기가 왔다”고 발언
- 동 회의에서 아랍 정상들은 아랍권 내 실업률 해소와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
 - 1월 27일에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아무르 무사 아랍연맹 사무총장은 “아랍세계의 문제는 아랍시민들의 분노와 좌절이며, 이 게임의 해법은 ‘개혁’”이라며 튀니지와 이집트 사태에 대한 해결책 모색
- 더불어 아랍국가들은 자국의 내부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국민들을 무마하기 위한 선심정책을 제시하기도 하였음.
- 시리아는 긴축조치를 철회하고 공공근로자들의 난방용 기름 보조금을 72% 인상
 - 요르단은 물가를 낮추기 위해 2억 2500만 달러 규모의 비상경제 계획을 발표
 - 쿠웨이트 정부는 40억 달러의 재정지출을 통해 국민 1인당 400만 원 및 생필품을 나눠주는 정책 제시
-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석유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득세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었고, 이는 아랍권의 전제정치를 눈감아 주는 요인이 되어왔음.
- 전 튀니지 대통령 벤 알리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이었던 프랑스 정부도 경제적 관계와 이슬람 극단주의자 견제라는 정치적 이해를 고려 튀니지 사태의 초기까지 벤 알리를 지지하였음.
- 이란, 미얀마, 북한의 인권상황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프랑스

- 가 유독 튀니지에 대해서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은 자국의 이익이 결부되었기 때문
- 벤 알리 전 대통령의 도움으로 프랑스 기업들이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에서 기인
 - 알리오 마리 프랑스 외교장관은 시위가 한창이 1월 12일 튀니지 정부의 시위 진압을 도와야 한다고 언급, 그 이후 이러한 내용이 밝혀지고 벤 알리 정부와의 가까운 관계가 폭로되면서 마리 장관은 국내외의 비판과 사임압력을 받게 되어 결국 교체
 - 마리 프랑스 외교장관의 퇴진은 북아프리카·중동의 독재정권과 밀접한 정치·경제적 관계를 맺어온 유럽 정부가 더 이상 이를 유지하기 힘들어졌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
 - 국제사회가 튀니지 국민들의 시위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 총리가 “경찰의 강경한 시위진압은 문제”라고 비판한 것이 처음
- 그러나 튀니지 시민혁명이 성공하면서 프랑스는 벤 알리의 망명을 거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등 태도를 전환하였음.
-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은 초기에 튀니지 사태를 ‘반정부 시위’라고 표현하였으나 벤 알리가 물러나고 시민혁명이 성공하게 되면서 ‘독재자를 쫓아낸 재스민 혁명’으로 수정
 -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현 대통령도 벤 알리 전 튀니지 대통령을 친구라고 부르며 우호적 관계를 과시하였으나, 1월 14일 밤 튀니지의 정권 붕괴 직후 벤 알리가 프랑스로 망명하려 하자 프랑스 내 튀니지인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며 거절
 - 1월 15일 사르코지 대통령이 “프랑스의 정책은 타 주권국가에 내

정간섭을 하지 않는 것과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지하는 두 가지 원칙에 의거한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튀니지의 체제 변화를 인정

-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튀니지 사태에 대해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음.
 - 2006년 럼스펠드 전 미국 국방장관은 튀니지를 “투자, 기업, 사람 들에게 기회가 열린 성공적인 국가”라고 칭송한 바 있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2010년 벤 알리 대통령을 ‘세계 청년의 해’ 의장으로 지명
 - 세계은행은 2010년 보고서에서 “튀니지가 경제성장, 빈곤퇴치, 사회지표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는 등 국제사회는 벤 알리 일가의 부패와 독재는 묵인

- 미국은 대테러전 수행을 위해 아랍권 독재국가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들의 독재와 인권탄압을 묵인하였음.
 - 이러한 한계 때문에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튀니지 혁명을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혁명의 여파가 자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
 - 튀니지 혁명의 여파로 기존 중동 지역 독재 정권에 대한 시민의 저항이 확산되면, 독재자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저항이 독재정권과 우호적 관계를 맺어온 미국에 대한 반감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어 미국은 아랍의 민주화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 주저
 - 튀니지 혁명은 지난 수십 년간 아랍 독재국가들에 의존하고 있었던 미국 대중동정책의 구조적인 약점을 드러내는 계기

- 벤 알리 대통령의 하야 이후 미 정부는 독재 정권에 속해 있던 구정
치인들의 참여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과도정부에 대해 개혁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고 평가하였음.
 -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는 “튀니지 국민은 자신들
의 지도자를 직접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이들의 반정부 시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튀니지 과도 정부는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
되고 있지만 정치적 변화가 넓고 깊게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
 - 문제는 튀니지 시민혁명 과정에 이슬람 세력이 개입하지는 않았
지만, 튀니지의 과도정부가 정치범 및 정치단체에 대한 총사면
및 해금을 승인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독재정권에 의해 억압
당했던 이슬람 원리주의 정당들이 정치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
아졌다는 사실이며, 미국은 이러한 이슬람세력의 부상을 우려

- 영국 등 유럽국가들은 구정권 인사들의 망명신청 거부, 자산동결,
시민들의 시위에 대한 지지선언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튀니지 시민
혁명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하였음.
 -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교장관은 “튀니지 내 인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튀니지 혁명 지지 발언
 - 스위스 중앙은행은 벤 알리 전 대통령을 비롯해 축출된 지도자들
의 자국 내 모든 가용자산을 동결하며 새로운 정부가 요구할 경
우 이들의 계좌열람 등을 지원하겠다는 의사 표명

2. 이집트

- 이집트 사태의 기본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권력 세습을 둘러싼 집권층 내부의 갈등
- 무바라크의 권력 세습 시도에 반대하던 군부는 대중 시위가 발생하자 이를 방치 또는 부추기면서, 무바라크의 사임과 권력세습 포기의 목표 달성
- 경제에 깊숙이 개입해 있던 군부는 정치적 기득권과 함께 경제적 특권을 유지하고자 했으나, 무바라크의 아들 가말은 민간인 경제 엘리트를 기반으로 이집트 경제의 민영화와 개방을 추진하는 중이었으며, 이것이 이익 충돌로 비화
- 대중 시위는 좁은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소수만이 동원되었고, 사회적 미디어가 의사소통 역할을 했으나, 그 역할의 중요성은 미지수

가. 시민들의 저항

1) 시민 저항의 주요 특징

- 이집트 사회는 낮은 삶의 수준과 극심한 빈부격차, 콥트교도와 무슬림 간의 긴장, 2010년 부정 선거로 인한 합법성의 위기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음.
- 2011년 1월 27일 이집트에서는 1970년대 이래 시민 군중이 전례가 없는 지리적인 범위와 참여규모를 통해 정권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는데 그 배경에는 다음 요인들이 작용함.
- 첫 번째, 시기적으로 튀니지 재스민 혁명의 영향을 받았음.
 - 튀니지의 불안은 알제리, 요르단, 예멘 등 다른 아랍권 국가 시민들을 촉발시켜 그들로 하여금 경제, 사회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

- 며 시위하도록 유도
 - 이와 같은 시위로 아랍권 국가들의 안보 관련 정부기구의 통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났고 그 결과 이집트에서도 대규모의 시위가 발생
- 이집트에서 1월의 분노의 날은 1952년 영국 점령에 맞서 싸운 경찰 영웅들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과 겹쳤음.
 - 그 날 경찰은 국가를 방어하는 임무와 시민들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
- 두 번째, 이집트의 시민 시위는 단지 국내적인 이유로 발생했음.
 -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세계적인 제국주의의 죽음”이나 “팔레스타인과 이라크에도 자유를”과 같은 문구는 미 등장
 -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수에즈의 거리에는 오직 변화, 자유, 사회적 정의, 이집트 부패 중단과 같은 요구들만 슬로건으로 등장
 - 2003년 이라크의 침략이나 2006년 레바논 전쟁, 2008~2009년 가자의 전쟁과 같은 주요한 지역적인 사건들에 대한 저항과는 분명한 차이점 존재
 - 과거 이집트의 개혁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종종 지역적인 사건들과 섞여있었고 특히 중동에서의 이스라엘과 미국 정책과 중첩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이슈들과 무관
- 세 번째, 수년간 이집트의 정치와 공공의 영역을 지배해 왔던 이데올로기적인 미사여구가 조금도 발견되지 않았음.
 -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hood)의 청년들과 그들의 지도자

들이 시위대에 참여했을 때에도 “이슬람이 해결책이다”라는 이야기는 부재

- 소수의 좌파 조직체들의 행동주의자들도 시위에 참여하였으나 평소주장인 세계적인 제국주의, 식민주의, 시온주의 등에 대한 비난은 부재

○ 과거 몇 년 동안 유행했던 이데올로기가 시민들을 동원하고 설득하는데 비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음.

- 우선 이데올로기적인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무슬림 형제단과 좌파 행동주의자들과 같은 정당이나 비정당은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진정성 있는 정치개혁에 실패
- 2010년 의회선거 결과는 이집트에서 그들의 메시지가 갖는 매력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
- 또한 이번 시위는 청년들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이들은 대체로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
- 그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전파하고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변혁을 요구하는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추므로써 사람들의 참여 유도에 성공

○ 네 번째, 시위대의 활동에서 청년들의 역할이 두드러졌음.

- 과거 이집트인들은 노동자 집단이나 공무원들의 파업에 대해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이러한 방관적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
- 의회 선거를 반대하고 보이콧 하는 정당 뿐만 아니라 반대 세력

I

II

III

가운데 청년들이 시위에 참여하였고, 정치적 중립입장을 지녔던 알가드, 민주전선, 와프드, 무슬림 형제단도 시위에 참여

- 이것은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일반적인 청년과 청년 행동주의자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함.
 - 이것은 또한 가상의 네트워크가 시민들 동원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
 - 물론 4월 6일 청년 운동처럼 온라인상의 운동에 참여한 숫자와 실제 시위에 참여한 청년 수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지만, 청년들의 참여는 증가

- 다섯 번째, 빵과 버터에 대한 요구는 특정한 정치 개혁과 부패에 맞서는 수단과 결합되었음.
 - 사회경제적인 이슈와 정치적인 이슈가 연계된 양상은 그동안 찾아볼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사회경제적인 요구들이 계급주의적 요구라고 비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삶을 개선하기 위해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요구가 야당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
 - 사회경제적 요구와 정치적 요구가 분리되어 제기되면, 집권층은 사회경제적 요구에 대해 부분적으로 양보하지만, 정치적 요구는 자의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통해 대중의 불만을 관리
 - 그러나 이번 시위에서는 정치적 요구와 사회경제적 요구가 결합되었으며, 집권층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포괄적 변화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 시위가 있던 화요일에 알-카에다, 민주전선, 와프드당, 변화를 위한 국민위원회 등의 대표들은 시위자들의 요구와 제안들을 시행할 것을 수용했음.
 - 다시 말해서 그들은 비상사태법의 종료, 정치범 석방, 국회와 새로운 선거의 중단, 그리고 5번의 연이은 대통령 임기 이후에 이루어질 대통령 선거에서의 무바라크 출마 금지 선언 등을 수용
 - 그러나 시위자들을 처음 거리로 나오게 만든 사회경제적인 요구 사항은 도외시

- 이상의 다섯 개의 특징들은 이집트에서 시민들의 두려움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했음.
 - 시위자들은 사회경제적인 요구와 정치적인 요구가 함께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대중들의 참여 확대에 기여
 - 집권층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외의 사항들에 대해 모호한 약속을 하면 사태가 무마될 것이라고 오판

2) 무바라크 사임의 계기

- 무바라크가 결국 사임하게 된 것은 무바라크 정권의 구성원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집단들, 특히 군부세력이 무바라크 사임을 요구했기 때문임.
 - 시민과 군부의 광범한 세력은 무바라크의 독재가 계승되는 것을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인식
 - 무바라크 정권을 지지하던 세력들 중 일부는 시위를 위협이자 또 기회로 인식
 - 그 이유는 시위가 확산되면 체제를 전복시킬 것이라는 측면이 있

는 한편, 시위가 격렬해지면 무바라크가 사임하고 무바라크가 최근 임명한 부통령 오마르 술레이만과 같은 후임자를 내세움으로써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

- 이는 시위가 발생할 당시 정권의 지지세력이 분열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집트에서는 1979년 이란과는 달리 전국적 규모의 거대한 시위는 발생하지 않았음.
 - 보다 중요한 것은 시위자들은 개인적으로는 무바라크를 반대하였고 나아가서는 정권에 반대하였다는 것이며, 또한 시위를 주도한 야당 세력 내부에서도 심각한 분열이 존재

- 서구의 미디어들은 이번 시위의 요구사항을 서구의 자유 민주주의 도입이라고 보도했음.
 - 많은 이들은 서구의 민주주의를 요구했지만, 소작농, 노동자, 중산층등의 관심은 자유 민주주의 보다 이집트의 경제 상황 개선
 - 2009년 이란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처럼 민주주의 혁명은 민주주의자들 만으로서는 성공할 수 없으며, 성공하려면 더 많은 지지세력의 지원 필요

-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요소는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hood)’임.
 - 관찰자들의 의견은 무슬림 형제단이 현시점에서는 더 이상 급진적인 세력이 아니라 혁명에 영향을 주기엔 그 세력이 너무 약하다는 평가
 - 무슬림 형제단 안에는 다양한 세력들이 있으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무바라크의 억압을 받았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

- 무바라크 사임 이후에 누가 그들의 지도자로 부상할지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으며 민주주의 시위자들과 비교한 그들의 영향력 정도도 불분명
- 무슬림 형제단이 조심스럽게 처신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세력이 약하다고 판단해서는 곤란, 아마도 무슬림 형제단은 시간을 벌면서 자신의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채 무바라크의 후계 과정에서 등장할 수 있을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예측
- 무슬림 형제단은 대중들 사이에서 친서방적 시위군중보다 영향력이 더 클 수도 있을 가능성에 주목

나. 엘리트층의 성격과 대응

1) 기본 성격

- 이집트 군부는 2011년 1월~2월의 대중 시위를 자기의 입장에서 활용했음.
- 이집트에서 권력 승계 문제를 두고 군부 엘리트와 무바라크 및 그 아들 간에 이미 오래전부터 정치적 위기가 진행되어 오고 있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시위가 발생하자 군부가 이를 활용하여 무바라크를 퇴진시키고 권력세습을 좌절시키는 결과로 귀결
- 군부는 고무된 시위대를 활용하여 무바라크를 몰아냈지만 정권은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관철시켰음.
 - 겉으로 보기에 시위대가 결정적 역할을 했고 또한 그런 것처럼 보도되었지만, 권력은 시종일관 군부가 장악

- 이집트 시위대를 움직이게 만든 것은 튀니지에서의 정권 교체, 사회 경제적 좌절, 무바라크 대통령에 대한 극도의 실망 등이 누적된 것이었음.
- 시위대가 가장 많이 모였을 때 그 수가 20만 명에서 30만 명에 이르렀음.
 - 이는 많은 숫자이지만, 1989년 동유럽 혁명, 1979년 이란 혁명의 경우 수백만이 움직인 것과 비교
 - 시위는 카이로의 한 광장에서만 집중적으로 발생
 - 이집트 전체 인구는 8,000만 명이고, 군대와 경찰을 합한 숫자는 1백만 명으로 추산
- 군부는 시위대와 충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군부가 분열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바라크 제거라는 목표와 관련하여 군부와 시위대의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임.
- 2월 11일 무바라크 대통령이 사임했으며, 군부 평의회가 통치기구로 지명되었음.
 - 2월 11-12일 시위대는 타히르 광장에 집결하여 무바라크 퇴진과 민주주의의 승리를 축하
 - 13일 군사평의회는 헌법을 폐기하고 의회를 해산하는 한편, 국민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했고, 군부는 6개월 동안 또는 의회 및 대통령 선거가 준비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집권할 것을 천명

- 무바라크의 퇴진과 함께 민간인 엘리트가 제거됨으로써, 군부의 권력이 현저하게 증가했음.
 - 현재의 이집트는 60년 전 군부 장교의 쿠데타에 의해 성립했으며, 그 이후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군부가 이집트 국가의 핵심
 - 무바라크 정권(무바라크 개인의 정권이 아니라 집단으로서 군부를 무바라크가 대표하는)도 군부정권이었고, 무바라크가 퇴진한 후에도 군부정권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그 권력이 현저히 강화

2) 무바라크와 군부의 결별 배경

- 이집트의 정치위기는 무바라크가 군부 경력이 없으며 개혁추진성향을 가지고 있는 47세의 자기 아들 가말을 이집트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중을 분명히 드러내면서부터 시작되었음.
 - 이는 권력의 토대인 군부에 대한 직접적 도전으로 인식
- 이집트 정권은 나세르 대령이 이끄는 쿠데타에 의해 성립했고, 터키의 아타튀르크 정권을 모델로 했으며, 군부에 기반하고 있었음.
 - 군부는 군부통치의 지속을 희망한 반면, 가말로의 세습은 군부통치에 대한 도전을 의미
- 나세르가 군복을 벗은 이후에도, 군부는 정권의 근간으로 남아 있었음.
 - 정도 차이가 있을뿐, 후임 대통령인 사다트와 무바라크도 군복을 벗고 정치에 입문하였지만 군부통치의 전통 유지
- 무바라크가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내세운 것은 이집트 (군부)정권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었음.

- 아들 가말은 직업장교가 아니었고, 실질적 권력을 장악한 군고위층과의 연계도 결여
 - 이집트 군부는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겠다는 무바라크에게 경악, 만약에 아들이 권력 승계를 하게 된다면, 군부정권 수립 이전에 존재했던 세습왕조의 부활을 의미
 - 군부의 상당한 세력은 무바라크가 해야하여 권력 승계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인식
 - 군부는 고위 군부인사들이 수용할 만한 인물을 선택하여 9월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군부정권의 지속을 기대
- 이상의 과정의 핵심은 군부정권과 무바라크 개인 간에 확실한 구별이 존재했다는 것임.
- 이집트 정권은 군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복합적 체계로 이루어져 있지만, 군부가 통제하는 민간 관료제도 포함
 - 무바라크는 정권의 지도자이며, 나세르와 사다트의 후계자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개인 이익을 정권의 이익으로부터 차별화
 - 이에 무바라크는 군부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고, 군부정권이 그에 대해 등을 돌리게 된 것으로 해석
- 시위대는 무바라크의 퇴진을 요구했지, 군부정권의 퇴진을 요구한 적은 없음.
- 이러한 요구는 시위 군중이 거리에 나서기 이미 몇 달 전부터, 많은 장교들이 요구하던 사항
 - 군부는 군중시위가 발생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역설적으로 군부는 시위를 환영했는데, 그 이유는 무바라크의 미래를

- 위태롭게 할 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
- 군중 시위는 군부가 정권을 구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군부는 군중 시위 발생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켜 무바라크를 제거하고 군부정권을 존속시켰음.
- 2월 10일까지도 무바라크가 퇴진을 거부하자, 퇴진을 강제하기 위해 군부가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한 것으로 해석
 - 무바라크가 강제퇴진하자 군부는 군사평의회를 만들고 핵심 부처를 장악함으로써, 권력을 장악

3) 민간경제 엘리트와 군부 엘리트의 갈등

- 군부와 무바라크의 결렬 배경에는 군부 엘리트와 민간경제엘리트의 경쟁관계가 존재했음.
- 민간경제 엘리트는 대개 무바라크의 아들 가말 주변에 몰려 있었고 가말은 경제계에 대해 우호적이고 민영화를 지지한다는 평판
 - 군중 시위가 한창이던 2월 5일 가말은 집권당인 민족민주당으로부터 측근 세력과 함께 강제 퇴출
 - 이는 군부주변의 전통 정치세력이 득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 사다트 전 대통령은 경제계와 정치계 사이의 연계를 증진하는 첫 조치를 취했음.
- 그는 1974년 Intifah라고 불리는 경제개방정책을 폈고, 그 전에는 아랍사회주의의 정책 실시



- 사다트는 이집트를 친사업가적 경제체제로 만들어 외국 투자를 유도
 - 그러나 이집트 국가는 경제에서 항상 주도적 역할을 했고 은행부문에 대한 규제를 통해 외국합작기업을 통제
 - 그 결과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사업가 엘리트 부상
 - 공공부문의 팽창과 함께 이집트 군부도 변화하는 수요에 맞추어 이집트 경제에서 활동을 다각화
 - 1978년 캠프 데이비드협정 이후, 군부는 일부 군수 산업공장을 소비재물자 공장으로 전환시켰고, 이집트 민간시장에서 지분을 확대하기 시작
- 이러한 사업가들은 경제활동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민족민주당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음.
- 이와 같은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는 수십 년 동안 기능했으며, 집권세력은 일당독재를 하더라도 정치적 이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식
- 1991년 이집트의 두 번째 경제자유화가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 무바라크는 거시경제지표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국제통화기금과 대기협정(standby agreement)를 체결했음.
- 그러나 구조개혁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으며, 무바라크는 조심스럽게 경제에 대한 국가통제 유지
 - 국유 은행이 은행자산의 70%를 차지, 314개 국가소유기업 중에서 91개만 민영화

- 1990년대 말 가말의 사업가 그룹이 대두하기 시작했음.
 - 가말은 1999년 민족민주당의 사무국에 참가했고, 가말 주변의 대기업가들도 2000년 당정치위원회에 합류
 - 이러한 사업엘리트의 많은 사람은 이집트 의회와 내각에도 관직 보유
 - 이러한 사업가들은 이집트 경제를 민간부문에 개방하려고 했는데, 이는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고수하려는 전통정치세력의 이해관계와 충돌
 - 무바라크 대통령은 경제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승진이라는 보상을 통해 전통세력의 불만을 무마
 - 그러나 가말이 권력을 승계하면 가말 측근세력이 권력을 장악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 대두
 -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 충돌이 두 진영 간의 정치적 투쟁으로 전환

4) 경제에서 이집트 군부의 역할

- 이집트 정부 내 강경파는 전통군부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했는데, 이집트 군부는 투자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있었음.
 - 경제에서 군부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정보는 확인이 불가능
 - 1956년 통과된 313법은 군대에 관한 글을 쓰는 것을 금지
 - 어떤 평가에 따르면 30~45%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이집트의 군수생산부는 40,000명의 민간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소득이 대략 3억 4천 5백만 달러에 달함.
 - 이집트 군부는 군수물자 이외에도 생수, 올리브기름, 파이프, 소화기, 컴퓨터, 가전, 케이블과 같은 다양한 품목의 공장을 운영하



- 여 생산품을 민수시장에 판매
 - 이집트 군부는 시멘트와 같은 전략물자 생산에도 관여
 - 군수생산부 내에서 군수생산 국가조직은 16개의 군수공장을 관리
- 최근 정치 혼란의 가운데, 무바라크는 1월 28일 정부를 해산하고, 정부각료를 테크노크라트로 교체했음.
- 이는 가말 측근들의 정치적 경제적 자산 상실을 의미
 - 이것은 전통군부세력이 정치와 경제에서 우세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5) 무바라크 축출 이후 군부대응의 기본 방향

- 구 체제의 온존
- 무바라크 대통령이 제거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 체제의 제도적 구조는 대부분 유지
 - 튀니지의 경우 총리인 모하메드 간누치를 포함하여 벤 알리의 측근들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요한 정치 개혁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바라크 정권의 핵심적 중추였던 군부는 군사평의회를 통해 기존 정권의 제도적 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 집권당인 국민민주당이 무바라크 사임 이후에도 그를 계속 만난 것을 볼 때, 군부가 형태만 바꾸어 권력을 유지
- 저항세력을 회유하기에는 제한된 양보
- 이집트의 과도체제는 저항세력과 반대 세력들에게 제한적으로 양보함으로써 양측을 다 같이 회유하려는 노력을 하는 한편, 구

- 체제의 특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 군사평의회는 조치는 헌법을 개정하겠지만 신 헌법을 제정하지는 않겠다는 것과 같이 제한적

○ 선택적인 협의

- 야당은 자신들이 제안한 개혁안에 대해 협상할 것은 과도체제 지도자에게 제안
- 양측의 대화는 모든 정치적 이슈를 다룰 정도로 광범위하지 않은 상황
- 젊은 행동주의자들은 군부가 협상 테이블에 나와 협상할 것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

6) 이집트 헌법 개정 문제

○ 이집트의 군사평의회는 야당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여섯 개의 쟁점을 개정할 개혁위원회를 구성함.

- 개혁위원회는 선거절차와 대통령 입후보 자격과 관련한 헌법 조문의 개정을 예상하였지만, 일부 야당 세력들은 헌법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

○ 헌법 개정 과정에서 상호 토론의 제한

- 군사평의회는 헌법개정문제는 소수의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논의될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

○ 개혁 기간

- 군사평의회는 당장 헌법을 개정하라는 요구와 다른 한편으로 너무 빨리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주장 사이에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



7) 향후 시민 저항의 지속 가능성

- 시민들은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없으면 기존의 정권이 재생산될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 야당이 지속적으로 군부에 대해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구 정권의 잔재가 부활할 것을 우려
- 시민 저항세력은 제도적인 개혁 메커니즘을 결여함.
 - 대중들의 시위는 정치경제적 불만을 표출시켰지만 제도 개혁의 공식 과정에서 영향력은 제한적
- 야당 세력의 분열 양상은 협상력 제약의 원인으로 작용함.
 - 무바라크 정권의 억압적인 정책은 전통적인 반대 정당들을 취약하게 만들고 분열 유도
 - 한 동안 이집트에는 새로운 청년 연합과 농민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으며, 이들 중 몇몇은 1월 25일 혁명 이후에도 나타났지만, 내부 경쟁에 의해 분열
 - 야당의 단결 부족은 군부 지도부와의 협상에서 입지 약화 초래

8) 앞으로의 과제

- 이집트의 개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으로, 새로운 지도자는 당면한 경제적 과제 및 정치적 과제들을 해결해야 함.
- 취약한 경제
 - 이집트의 경제는 군중들의 저항과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심각하

계 불안정한 상황

- 이집트는 경제적 원조가 필요한 상황이며, 대중들은 무바라크 정권이 제안했던 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변경을 요구
- 만약 이집트의 새로운 정부가 정부 보조금을 늘리고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등 자유시장 정책에 반대하는 정책을 택한다면,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선호하는 미국 및 다른 원조제공 국가들은 반대 입장 표명 예상

○ 교육 개혁에 대한 긴급한 요구

- 공교육의 퇴보는 젊은 세대의 취업준비 능력 약화 현상 초래
- 교육시스템은 장기간의 해결책 필요

○ 서방국가의 이집트에 대한 과제

- 이집트의 시민저항은 서방국가들에게 무바라크를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무바라크의 사임을 외치는 저항세력의 편을 들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
- 오바마 행정부가 저항세력의 편을 든 것은 미국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중동의 권위주의 체제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
- 서방국가들은 예멘에서 반정부 시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카에다에 대적하여 미국의 테러방지정책에 협력하고 있는 예멘의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다. SNS 등 뉴미디어 역할

- 튀니지, 이집트, 이란(2009 녹색혁명) 등에서 사회적 미디어는 혁명

이념의 메시지 뿐만 아니라 훈련 프로그램과 행동 계획을 신속하고 광범하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음.

- 그러나 사회적 미디어만으로 혁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사회적 미디어는 하나의 소통 수단이지만 장점과 함께 취약점 내재
- 중국, 쿠바, 이란을 보더라도, 독재정권은 인터넷에 대한 통제 능력을 갖추고 있음.
 - 독재정권에서 인터넷 사용이 불만을 지닌 대중의 조직 및 행동능력을 단시간에 증가시키는 것에는 한계
- 사회적 미디어는 메시지를 신속하고 광범하게 전파하는데는 효율적이지만, 정부의 시위 억압에도 활용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음.
 - 사회적 미디어는 의사소통의 비용을 낮추는 장점이 있지만 주도인물과 시위진행상황을 정권에 노출시키는 약점 존재
 - 정부가 저항세력의 의사소통을 모니터하면서 대응하고, 사회적 미디어의 폐쇄 가능
 - 통제에 대한 자신감에 기초하여 2011년 2월 시리아 정부는 과거 5년 동안 실시하던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대한 금지를 폐기
- 혁명은 조직, 자금과 대중적 호소라는 배경 하에서 진행되며, 특히 능력 있는 지도부가 필요함.
 - 그러나 사회적 미디어의 지도부는 컴퓨터 조작 능력만을 보유
- 사회적 미디어의 지도부는 정치적 지도자로서 필요한 카리스마, 시

위 현장 지도능력,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전통적 사회집단들과의 협상 및 동원 등에는 취약함.

- 사회적 미디어가 지지하는 혁명이 성공하려면, 사회적 미디어 참가자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들어야 함.
 - 사회적 미디어에 참여하는 것과 거리에서 시위현장에 참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
 - 설사 거리의 시위현장에 등장하더라도 현장 경험이 많은 지도부가 이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필요

- 중동국가에서 인터넷 사용자는 소수집단(중동 평균 35%이하, 이집트 15.4%)임.
 - 실제로 동원된 대중은 소수집단을 대표하는 소수 군중이며, 따라서 사회 내의 다수(잠재 불만 세력 또는 시위 반대 집단)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
 - 실제로 시민들의 거리시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미디어의 네트워크보다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는 메시지 전파 능력이 중요
 - 이집트의 경우 사회적 미디어가 폐쇄된 이후 시위가 더욱 확대된 점은 사회적 미디어의 메시지 확산 효과가 결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입증

- 또한 사회적 미디어를 활용하는 집단은 서방매체와 의사소통이 쉽기 때문에, 서방에서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음.

라. 국제정치적 역학관계

- 이란은 이집트의 급진화에 대해서 이중적인 입장을 지님.
 - 급진적인 이슬람주의의 주도세력인 이란은 이집트의 급진화로 인해서 이집트와 주도권 경쟁을 하는 것을 불원
 - 이란은 이집트가 이슬람적인 국가가 되어 이란 동맹국으로 행동하는 것에 만족

- 서방국가들에게 이집트의 이슬람화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집트는 아랍 국가들 중에서도 중요하며, 1973년 아랍과 이스라엘 전쟁 이후 지속된 미국의 대중동전략의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
 - 구소련과의 동맹에 반대하며 미국과 동맹을 맺은 사다트의 결정은 지중해와 아랍 세계에서 구소련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미국에게 엄청난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
 - 9.11 사태 이후 이집트의 지식인들은 이집트 정부가 알-카에다와 관계를 끊고 알-카에다를 약화시키는 것에 대해 비판하였는데, 이집트가 미국과의 협력을 중단하고 적대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미국 입지의 약화 초래

- 이집트의 이슬람화로 가장 큰 피해자는 이스라엘임.
 - 그동안 이스라엘의 국가안보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 의해 보장
 - 시나이 반도의 비무장화는 이스라엘 남쪽 전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생존이 위태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
 - 만약 이집트가 참가하지 않는다면 어떤 반이스라엘 동맹도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것이 불가, 만약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상황이 변하겠지만, 이 가능성은 아직 요원

- 이집트와의 조약 이후 모든 전쟁(1982, 2006 레바논에서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활적 국가이익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 이익과 관련된 성격
- 만일 이집트의 새로운 정부가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폐지하고 군사력을 증강한다면 협정 이전에 존재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이 재현할 수 있음.
 - 이스라엘은 두 가지 현실에 대한 고려 필요
 - 첫째,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이집트를 통제하고 점령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것
 - 둘째, 이집트 군사력 증강이 이스라엘에게 군사적 대응 비용의 지출을 초래
- 미국이나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에게까지 손해를 주면서 급진적인 이슬람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음.
 -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무슬림 형제단이 이집트에서 지배적인 정치 세력이 되는 것
 - 다른 하나는 무슬림형제단의 급진적인 변화
- 이상의 시나리오는 만약 민주주의 지지자들이 승리하고 그들이 엘바라데이와 같은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한다면, 실현되지 않을 것임.
 - 친서구적 민주주의 분파는 주로 국내적 쟁점들에 신경을 쓸 것이며, 세속적일 것이며 캠프 데이비드 조약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왜냐하면 이것은 군부의 세력을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인 바, 그들이 정권을 장악하면 중동지역의 세력관계는 불변

- 또한 군부세력이 권력을 유지할 경우 중동지역의 세력관계는 불변할 것임.
 - 그러나 군부세력이 반서구적이고 반이스라엘적인 정책을 취한다면 군부정권의 반대중적인 성격이 완화될 가능성
 - 이처럼 군부정권이 친이슬람정책을 택할 경우 무슬림 형제단이 집권한 것과 비슷한 상황 발생 가능
 - 이것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군부 정권이 안정을 위해 의도적으로 무슬림 형제단과의 동맹을 맺는 경우

3. 리비아

- 리비아 사태의 기본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무아마르 카다피(Muammar al-Qadhafi)는 1969년 무혈 쿠데타로 집권한 이래 42년째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최장기 집권한 지도자
 - 카다피는 ‘자마히리야’라는 일종의 ‘직접민주주의’를 실시하면서 정당·의회제도 거부
 - 30%에 육박하는 실업률(인구 660만 명/30세 이하 청년층 60%)
 - 리비아 사태는 초기 튀니지와 이집트의 시민봉기의 영향을 받았지만 곧 부족 간 내전의 성격과 결합
 - 미국 및 NATO 주도의 무력 개입은 아랍 시민봉기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
 - 카다피의 출신 지역인 중부 수르트 지역의 카다피족의 지지 세력과 미국 및 NATO의 지원에 힘입은 동부 벵가지 지역을 중심으로 반(反)카다피 세력 간의 내전 상황
 - 반카다피 세력은 초기부터 무장한 반군세력

가. 시민들의 저항

- 리비아는 아프리카에서 영토 크기 4번째의 나라로, 2010년 기준으로 인구 660만 명, 명목GDP 약 765억 5,700만 달러, 1인당 명목GDP 11,852 달러이며, 아프리카에서 인간개발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 원유매장량(확인 기준) 세계 10위, 원유 생산량 세계 17위, 원유 수출세계 12위, 저유황 경질유 생산량 세계 1위
 - 리비아의 석유 수출은 2010년 약 400억 달러
- 리비아에는 최소 140개의 부족이 있으며 이중 와르팔라(Warfalla)족, 카다파(Gaddafa)족, 주와야(Zuwayya)족이 3대 부족으로 리비아 사회는 여전히 부족체제에 의해 작동하고 있음.
 - 와르팔라족은 리비아 서부지역의 최대 부족으로 52개의 하위 부족으로 구성
 - 카다파족은 리비아 중부지역의 최대 부족으로 카다피가 이 부족 출신이며 가장 영향력이 큰 지배 부족
 - 주와야족은 리비아 동부지역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부족
- 리비아는 1951년 12월 24일 국왕으로 중심으로 하는 연방왕국으로 독립하였으나, 1969년 9월 1일 카다피 대위를 중심으로 한 청년장교들이 무혈 쿠데타를 일으켜, 왕정을 폐지하고 리비아 아랍공화국을 선포하였음.
- 이후 리비아는 카다피가 ‘혁명의 국가지도자(Brother Leader and Guide of the Revolution)’라는 명칭으로 통치하면서 42년 간 장기

집권하고 있는 아프리카·중동지역에서 최장기 독재국가임.

○ 카다피는 1969년 국가명을 리비아아랍공화국(Libyan Arab Republic)으로 변경하고, 1973년에는 기존의 모든 법률을 정지시키고 이슬람종교법(Sharia)의 실시를 선언하였음.

○ 리비아는 1977년 공식적인 국가명으로 ‘대사회주의 인민리비아 아랍자마히리야(the Great Socialist People’s Libyan Arab Jamahiriya)’를 채택함.

- ‘자마히리야’는 ‘대중의 국가(state of the masses)’라는 의미로, 카다피의 소위 ‘제3세계 이론’에 입각한 인민직접통치체제 형태이며 정당·의회제도를 부정

- 452개의 자치공동체에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기초인민회의 및 행정기관인 인민위원회를 설치

○ 카다피는 40년 이상 장기 집권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향유해왔으며, 그의 권력 기반은 석유를 기반으로 한 국방의 독점과 육군 45,000명, 해군 8,000명, 공군 23,000명 등 76,000명의 현역 병력과 민병대 40,000명으로 구성된 군사력임.¹

- 2011년 3월 19일 유엔 결의 1973호에 따른 비행금지 구역 설정과 공습으로 공군력을 비롯한 군사력 약화

○ 또한 카다피는 ‘혁명 보호’의 명분 아래 ‘민병대(people’s militia)’

¹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07*, (UK: Routledge, 2007), pp. 234-235.

를 설립하고 일종의 ‘문화혁명’을 실시하였는데, 동 문화혁명은 카다피를 우상화하는 수단이었음.

- 카다피는 매우 강력한 감시체제를 설립하였는데 총인구의 10~20%가 정부·공장·교육 등 각 부문에서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
- 카다피는 반대자의 공개처형 및 처형장면의 국영 TV 반복 방영, 그를 비판하는 해외거주 리비아인 암살단 고용 등 공포통치를 실시

○ 카다피의 권력은 ‘혁명지도자’로 명명된 카다피 자신과 12인 혁명위원회(Revolutionary Command Council)에 기반하고 있으며, 장기 집권을 하면서 권력유지를 위해서 일가친척과 소수의 자신의 충성파들에게 권력을 집중시켰음.

○ 카다피의 7남 1녀 중 NATO 공습(4.30)으로 사망한 6남을 제외하고 모든 자녀가 국가안보기구, 군, 경찰 등 정부의 고위 직위 또는 석유·정보통신·국영방송 등 국영기업을 장악하고 부정축재와 언론 탄압에 앞장섬.

- 카다피는 석유 자원으로 벌어들인 돈의 상당부분을 무기구매와 테러 지원에 사용
- 리비아의 부패 지수는 2010년 2.2(10점 만점)로 부패가 매우 심한 나라로 평가되었으며 이집트와 튀니지보다 부패 정도가 심한 것으로 분석

○ 또한 카다피는 장기 집권과정에서 자기가 속한 카다피족에 대해서는 각종 특혜를 주는 반면 와르팔라족과 주와야족은 차별하였으며,

I
II
III

이에 따라 부족 간 갈등이 항상 내재하고 있었음.

- 세계은행은 유엔의 경제제재로 리비아가 약 1,08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1992년에 시작된 유엔 제재로 연속 타격을 입은 리비아는 실업률이 30%, 인플레이션율이 연 50%를 육박하는 등 심각한 경제 문제에 봉착하였음.
- 세계 경제위기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 지역의 총인구(약 3억 8,000만 명)의 23%인 약 8,800만 명이 1일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대 빈곤 수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리비아 국민의 1/3 이상이 빈곤 수준 이하
- 리비아의 경우 특히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30세 이하의 청년 인구 실업률이 30%대에 육박하였으며, 곡물 및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음.
 - 리비아는 식량의 75%를 수입에 의존
-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1월 13일~16일 간 정부의 주택사업 부실과 부패에 저항하는 시위가 다르나(Darnah), 벵가지(Benghazi) 등의 도시에서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리비아 정부는 240억 달러의 투자계획을 발표함.
- 그러나 1월 하순 튀니지, 이집트의 봉기에 영향을 받은 정치평론가 하지(Jamal al-Hajji)가 인터넷을 통해 리비아의 자유를 위해 시위를 할 것을 주동함.

- 2월 15일 이후 제2의 도시 벵가지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고, 이어 2월 17일 열린 ‘분노의 날’ 행사가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어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 당초 ‘분노의 날’ 행사는 2006년 벵가지에서 열렸던 이슬람주의자 집회에서 14명이 사망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
 - ‘분노의 날’ 행사의 제안은 SNS 수단인 페이스북을 통해 등장

- 벵가지에서 시작된 반정부시위는 카다피 정권의 강경 대응으로 유희사태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카다피의 아들 알-이슬람(Saif al Islam Al-Qadhafi)은 2월 21일 내란을 경고하면서 폭력 진압을 강화함.
 - 국제인권연맹은 카다피가 강경 진압을 거부하는 군인 130명 이상을 처형했다고 보고했으며, 보안군과 군인들이 ‘민주화’ 요구 시위대를 공격
 - 카다피는 2월 22일 국영 TV에 등장, 정부군에게 강경 진압을 지시

- 반정부 시위대는 제2의 도시 벵가지와 제3의 도시 미스라타를 장악하는 등 세력을 확장하고 카다피는 이에 강력한 군사 대응을 전개함으로써 리비아는 친카다피 정부군과 반카다피 반군과의 내전 상태로 접어들게 됨.
 - 반군 세력은 주로 교사, 학생, 변호사, 석유산업 종사자들로 구성되었으며, 리비아 정부군에서 이탈한 일단의 직업 군인들도 합류
 - 카다피 정권은 알-카에다(al-Qaeda)세력이 반군의 주축이라고 주장

- 리비아의 내전은 동시에 카다피의 카다파족 및 그 지지 세력과 와르팔라족, 주와야족 등 카다파족의 지배에 반대하는 부족들이 연합한 반(反)카다피 세력의 부족 간 분쟁의 성격도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음.
 - 카다피의 아들 알-이슬람은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지면 리비아가 “15개의 이슬람 근본주의 토후국(emirates)으로 분열될 것”이라고 주장
 - 반카다피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부족들은 카다피 정권 축출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카다피 이후에 대해서는 공통된 비전 결여
 - 반카다피 세력 내에는 부족주의(tribalism)와 분파주의(factionalism)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존재

- 또한 자유 올레마 네트워크(Network of Free Ulema) 등 리비아의 이슬람 지도자 및 성직자들이 모든 무슬림들에게 카다피에 대해 저항할 것을 촉구하고, 와르팔라(Warfalla)족, 투아레그(Tuareg)족, 마가라(Magarha)족, 주와야(Zuwayya)족 등이 반카다피 저항을 지지한다고 선언함.

- 카다피 정권의 유혈 진압에 대한 항의로 2월 22일부터 일부 정부 고위관리와 해외주재 외교관, 군 장교들의 이탈이 시작됨.

- 반카다피 세력은 벵가지에서 2월 26일 전 법무장관 잘릴(Mustafa Abul Jalil)을 의장으로 하는 과도국가위원회(National Transitional Council 또는 Libyan National Council)를 수립, 반정부 시위가 분

격적인 내전 상황으로 전환됨.

- 내전 상황이 전개되면서 정부군의 진압을 피해 리비아를 떠나는 난민이 급증하여 2011년 4월 현재 50만 명을 상회

- 과도국가위원회의 통치지역은 ‘리비아공화국(Libyan Republic)’으로 명명되었으며, 3월 5일 과도국가위원회는 자신들이 ‘전체 리비아의 유일한 대표(sole representative of all Libya)’임을 선언하였음.
 - 3월 23일 지브릴(Mahmoud Jibril)을 총리로 하는 임시정부 수립
 - 프랑스, 카타르, 이탈리아, 포르투갈, 일부 아랍국가 및 유럽국가가 과도국가위원회를 승인

- 3월 17일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1973호가 채택된 후 공군력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군사 개입이 시작되었으나 친카다피 정부군과 반카다피 반군 사이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음.
 - 카다피군은 민간인을 ‘인간방패’로 활용하는 등 많은 사상자가 발생

- 사상자가 증가하고 내전이 교착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아프리카연합(AU)이 4월 초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국제사회가 중재에 나서고 있으나, 반군은 카다피 정권의 축출을 목표로 중재를 거부함.

- 2011년 6월 초 현재 리비아 사태는 친카다피 정부군과 반카다피 반군 간 공방이 지속되고 ‘NATO 주도·미국 참여’ 방식의 국제적 군사개입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임.
 - NATO군의 공습(4.30)으로 카다피의 6남과 손자 3명이 사망

I
II
III

나. 엘리트층의 성격과 대응

- 카다피는 일가친척 및 자신의 출신 부족 카다파족의 충성파들을 군 부 및 정부의 주요 직위에 임명하고 경쟁자들을 견제·제거함으로써 권력의 안정과 경제발전을 추진해왔음.
 -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권력의 핵심에 진입

- 카다피의 장기 독재는 일종의 ‘사회주의체제’를 통치의 기반으로 하였으나 리비아 사회에는 여전히 부족사회가 작동하고 있음.
 - 정부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아온 거대 부족인 와르팔라족과 주와야족은 카다피정부의 잠재적 도전세력

- 카다피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엘리트층을 용납하지 않는 정책을 펼쳤으며 작가, 지식인, 반대세력에 동조하는 저명인 등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해 불법체포, 감금, 고문, 처형 등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함으로써 잠재적 저항세력을 키웠음.

- 카다피의 장기 집권 과정에서 그에게 충성하는 권력엘리트들은 부와 관직 등의 혜택을 누려왔으나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분출되고 카다피가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하려 하면서 엘리트 계층에서 이탈자가 발생하기 시작함.

- 2월 21일부터 시위대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에 저항하는 일부 정부 고위관리와 해외주재 외교관, 군 장교들의 이탈이 시작됨.
 - 시위대에 대한 폭격을 거부한 두 명의 공군 대령이 전투기를 몰고 말타에 착륙, 정치적 망명을 신청

- 이후 카다피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엘리트들이 정권에서 이탈하기 시작함.
 - 법무장관 잘릴(Mustafaa Abul Jalil 또는 Mustafa Mohamed Abud Al Jeleil), 내무장관 유니스(Abdul Fatah Younis) 장군, 검찰총장 알-압바르(Abdul-Rahman al-Abbar) 등이 시위대에 합류
 - 석유장관 겸 리비아국영석유공사 사장 가넴(Shukri Ghanem), 외무장관 쿠삭(Moussa Koussark)이 리비아를 탈출, 쿠삭은 영국으로 망명
 - 또한 마무드(Suleiman Mahmoud), 만수리(Musa'ed Ghaidan Al Mansouri), 알카라위(Hassan Ibrahim Al Qarawi), 알카프시(Dawood Issa Al Qafsi) 장군 등 군부의 고위급 장교들과 소수의 공군조종사 및 해군함장들이 반군에 합류

- 이 밖에 아랍연맹, EU 및 UN 주재 리비아 대사들이 카다피 정권을 비난하면서 이탈하고, 방글라데시, 벨기에, 중국,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미국 등에 주재하던 리비아 대사들이 카다피 정권을 비난하고 사임함.

- 석유장관 겸 리비아국영석유공사 사장 가넴(前 총리)은 2011년 5월 14일 튀니지로 망명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반카다피 시위 발생 이후 전직 리비아 관료로는 최고위급의 망명자로 기록됨.

- 리비아에서 두 번째 규모의 국영석유회사인 아랍걸프석유회사(Arabian Gulf Oil Company)는 석유기금을 반카다피군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함.

- 반정부 시위가 진행되면서 1969년 카다피의 쿠데타에 의해 쫓겨난 이드리스(Idris)왕의 방계들인 무하마드 아즈-세누시(Muhammad as-Senussi)와 이드리스 알-세누시(Idris al-Senussi) 등이 반카다피 세력을 지지하고 국제사회에 반군 지원을 확대할 것을 호소하는 등 카다피 이후의 리비아 권력 재편에 참여하려는 의도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무하마드는 언론 회견, 프랑스 및 사우디의 중재를 통한 미국과의 접촉 등을 통해 입헌군주제의 복원을 언급하는 등 적극적인 권력회복을 모색

다. SNS 등 뉴미디어 역할

-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휴대폰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리비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님.
 - 2005년 8,800만 명에 불과했던 아프리카의 휴대폰 사용자가 2010년 3억 3,300만명으로 약 3.8배 성장
- 휴대폰은 유선전화, 인터넷보다 보급 비용이 저렴할 뿐 아니라 생활의 양상, 사고방식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10년 아프리카의 유선 인터넷 사용자는 100만 명(보급률 0.2%)인 반면,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는 2,900만 명(보급률 4.4%) 이상
- 휴대폰 사용과 함께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보급, 모바일 인터넷 사용 인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휴대폰 가입의 급증은 1인당 소득이 낮은 국가도 예외가 아니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북아프리카지역 국가들의 경우 휴대폰 보급률은 5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리비아는 2010년 기준 1인당 명목GDP 11,852 달러로 아프리카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편이며, 아프리카에서 인간개발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
-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폭력과 과잉진압 현장의 사진이 SNS를 타고 즉각 생생하게 전달됨으로써 빈부 격차, 높은 실업률, 부정부패 등이 만연한 아프리카지역 국가들의 일반 대중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음.
- 리비아의 경우도 1월 하순 정치평론가 하지(Jamal al-Hajji)가 인터넷을 통해 리비아의 자유를 위해 시위를 할 것을 주동함.
- 또한 카타르 도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위성방송 알자지라(Al Jazeera)와 동 방송의 인터넷이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정보 확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리비아의 반정부 시위가 인터넷 등을 통해 외부로 전달되자 카다피는 인터넷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해외 언론의 접근도 정부의 허락 하에서만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

라. 국제정치적 역학관계

- 중동·아프리카지역에 대한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는 미국 등 서방국

의 이 지역에 대한 정치·외교적 영향력, 원유 등 자원 확보에 대한 이해관계, 테러집단에 대한 대처, 지역 국제질서의 변동, 난민 보호 및 구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안임.

○ 1951년 이래 리비아 왕국은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 서방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소련과도 1955년 국교를 수립하는 등 친서방 외교를 전개했으나, 1969년 카다피 집권 이후 미국·영국의 기지를 폐쇄하고 외국 투자 석유 산업의 국유화 등 반서방 외교를 전개함.

- 카다피는 친팔레스타인 정책을 추진하고 테러행위 지원 등 미국, 영국 등 서방권과 갈등 관계
- 그러나 2003년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서방권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했으며, 미국과는 2004년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재개

○ 유럽연합 국가 중 이탈리아는 2008.8.30 리비아와 벵가지에서 협력 조약을 체결하고 양국 정상은 상호 방문하는 등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음.

- 이 조약에서 이탈리아는 2차 대전 당시 점령의 대가로 5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하였고, 리비아인의 불법 이주 단속과 이탈리아의 리비아 투자 촉진을 약속

○ 미국은 중동·북아프리카지역의 평화와 안정, 원유 공급시장의 안정, 테러집단 알-카에다에 대한 공동 대처 등을 중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요구가 외교이념의 가치에 부응하지만 동시에 원유 공급, 테러 확산 가능성, 독재정권 붕괴 이후의 정치적 안정, 지역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함.

- 특히 이라크·아프가니스탄의 두 개의 전쟁에 상당한 군사력과 자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제3의 전쟁에 연루되는 상황을 우려
- 따라서 미국은 독재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 저항에 대해 각국의 집권자들이 자유, 인권 등 민주주의의 보편 가치와 각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강조하면서도 중동지역의 국제질서와 테러와의 전쟁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 신중하게 접근하는 태도를 보임.
 - 튀니지·이집트 등지에서 시민 저항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각국 정부와 접촉하면서 평화적 시위를 보장하고 폭력적 진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 특히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자국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온 이집트에서의 급격한 변화가 이슬람 급진세력의 등장이나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집단과 연계될 가능성을 우려함.
 - 이집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미국의 막대한 지원을 받으면서 ‘미국의 중동 안전판’ 역할을 해 온 국가
- 그러나 미국은 시민저항에 의해 튀니지의 벤 알리(Zine el-Abidine Ben Ali) 대통령과 이집트의 무바라크(Mohammed Hosni Mubarak) 대통령이 권력에서 물러나자 환영 입장을 표명함.
 -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 국무장관은 2011년 1월 14일 벤 알리 대통령의 사임으로 튀니지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경제·사회·정치개혁과 자유·공정선거를 통해 민주 사회를 건설할 것을 기대
 -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2월 11일 무바라크 대통령의

사임이 이집트 국민의 변화 욕구에 대한 수용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집트의 민주화 여정이 평화롭고 건설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

- 이집트에 이어 리비아에서 2월 15일 이후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자, 미국은 독재자 카다피에 대해서 반정부 시위대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카다피 이후의 리비아 정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 개입에 대한 국내여론의 반대 등으로 초기에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음.

-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리비아 사태의 전개에 따른 미국의 제3의 전쟁 개입 가능성을 우려함.
 - 미국에게 리비아는 국가이익 차원에서 예멘, 시리아, 바레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한 국가
 -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이후 리비아에서 강경 이슬람 세력에 의한 반미 정권이 등장할 가능성을 우려
 - 리비아가 무정부 상태로 전락, 장기 내전에 빠질 경우 미국의 중동정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
 - 또한 혼란 상태의 지속 상황에서 알-카에다의 발호 가능성을 우려
 - 따라서 2월 20일까지만 해도 미국은 리비아 정부가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평화적 시위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

- 유럽 국가들은 각각 리비아와의 관계의 역사적 배경,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취함.
 - 프랑스는 △리비아 원유에 대한 높은 의존도, △2012년 대선을

- 앞둔 사르코지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제고, △1966년 시작된 차드 내전 관련 카다피와의 갈등 역사 등으로 리비아 내전에 적극 개입 입장
- 영국은 비행금지 설정 등에 적극 동조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
 - 리비아와 외교관계를 확대한 이탈리아는 반카다피에는 동조하지만 적극적인 군사 개입에는 유보적
 -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독일과 러시아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입장
- 벵가지에서 시작된 반정부시위는 많은 희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카다피의 아들 알-이슬람(Saif al Islam)은 2.21 내란을 경고하면서 폭력 진압을 강화함.
- 이에 따라서 2월 22일부터 일부 정부 고위관리와 해외주재 외교관, 군 장교들의 이탈이 시작됨.
 - 카다피 정부에서 이탈한 반대세력은 거점인 벵가지에서 2.26 전 법무장관 잘릴(Mustafa Abul Jalil)을 의장으로 하는 과도국가위원회(National Transitional Council 또는 Libyan National Council)를 수립
 - 유엔난민고등대표부(UHCR)는 100,000명 이상의 리비아 난민이 발생하고 그중 대부분이 튀니지와 이집트 등으로 피신했다고 보도(2.27)
- 미국은 카다피가 반정부 시위대를 폭력으로 진압하는 강경 대응으로 인해 유혈사태(내란) 상황으로 전개되자 카다피에 대한 강경 비난

과 함께 군사적 수단의 동원을 검토하기 시작함.

- 2011년 2월 21일 클린턴 국무장관 특별성명 발표: “미국은 국제 사회와 함께 리비아의 폭력을 강력히 규탄함”

○ 그러나 미국은 리비아 사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3번째의 전쟁으로 확대되어 깊이 개입되는 것을 우려하여 프랑스, 영국 등 일부 유럽국 가와는 달리 군사행동에 대한 결정을 미룸.

- 이러한 상황에서 알-카에다의 북아프리카 지부(AQIM)는 2월 23 일 리비아의 반정부 시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

- 카다피는 강경진압을 발표하고, 각국 정부는 자국민 소개 작전을 전개

○ 카다피의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 하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어 영국, 프랑스의 공동 주도로 무기 금수, 카다피 및 그 자녀, 핵심 측근에 대한 여행금지 및 해외 자산 동결, ‘반인도 범죄’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을 내용으 로 하는 리비아 제재결의 1970호가 만장일치로 통과됨(2.26).

- 중국, 인도, 브라질, 포르투갈 등은 논의 초기에 ICC 회부 내용에 반대하였으나 결국 찬성

- ICC 회부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던 미국은 영국, 프랑스의 입장을 지지

- ICC는 유엔안보리의 리비아 사태 회부에 따라 3월 2일 리비아사 태에 대한 조사 착수를 발표

○ 미국이 군사 개입에 대해 다소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프

랑스와 영국은 리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보임.

- 프랑스는 다른 나라들에 앞서 리비아의 반군 정부를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군사적 개입에 대해서도 적극적 입장을 보임으로써 북아프리카에 대한 외교력 회복을 모색
- 영국도 비행금지구역의 설정이나 유엔의 동의 없이 카다피 정권에 압박을 가할 것을 주장

○ 반면, 중동·아프리카지역에 대해 자원외교를 활발하게 전개해 온 중국은 리비아 사태가 내부분쟁이라는 입장에서 유엔의 승인이 없는 어떠한 군사적 개입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BRICs의 일원인 러시아와 브라질도 중국과 유사한 입장을 유지

○ 그러나 카다피의 군사적 대응이 더욱 강경해지고 반정부 시위대의 위세가 위축되면서 많은 희생자의 발생 상황이 우려되자, 유엔 안보리는 3.17 리비아에 대한 공습을 포함하는 내용의 유엔결의 1973호를 채택함.

- 29개의 항으로 구성된 1973호는 “국민보호에 대한 리비아정부의 책임을 재확인하고” 제4항에서 “유엔 회원국이 민간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모든 조치(all necessary measures)”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 리비아 전역을 대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6~12항)
- 다만, 리비아 영토 어떠한 곳에서도 어떠한 형태의 외국군 주둔을 배제(4항)

I
II
III

- 미국은 카다피가 “끝까지 싸울 것”이라면서 반군에 대한 군사적 공세를 강화하자 리비아 인군으로 해·공군 전력을 전개하면서도 군사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함.
- 카다피의 군사공세가 강화되면서 NATO와 EU가 3.10-11일 국방장관회의와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프랑스, 영국 등이 리비아 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주장했으나 미국은 이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함.
 - 아랍연맹(22개 회원국)은 3.12 유엔의 개입을 촉구하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지지
- 그러나 카다피의 군사공세가 반군지도부(과도국가위원회)의 근거지인 뱅가지를 위협하는 정도로 전개되면서 유엔안보리가 소집되고, 프랑스, 영국 등의 주도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재결의 1973호가 채택됨(3.17).
 - 미국은 제3의 전쟁 개입 우려로 유보적 입장을 유지하다가 뱅가지가 위협 상황에 처하자 결국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찬성
 - 중국, 러시아는 반대 입장에서 아랍연맹의 압박으로 기권으로 선회
 - 독일은 군사적 조치의 위험성을 이유로 기권
- 이후 미국은 프랑스, 영국과 함께 3월 19일부터 해군 및 공군력을 동원하여 카다피 정부군 및 주요 시설에 대한 미사일 및 공중 폭격으로 군사행동을 전개하였으나, 제한적 군사작전임을 강조함.
 - 오바마 대통령은 3월 19일 미국의 군사행동은 “제한적 작전”에 국한하며 3월 28일에는 정권교체가 목표가 아니라고 언급

-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힘에 의한 카다피 축출을 시도할 경우 연합군의 분열과 미국의 지상군 투입에 따른 위험 부담과 비용 및 책임 부담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제한적’ 군사개입의 필요성을 강조
 - 클린턴 국무장관은 3월 29일 국제사회는 카다피가 몰려날 때까지 압박하고 고립시켜야 한다고 강조
- 미국, 영국, 프랑스의 정상들은 리비아에 대한 공습을 결정하면서 카다피가 리비아 국민에 대한 보호책임을 외면하고 인권을 유린했다는 점을 공통으로 강조함.
- 오바마 대통령은 “폭압적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강조
 -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민을 살해하고 정당성을 상실한 체제의 살인적 광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적 행동에 나섰다”고 언급
 -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카다피가 자국민에 잔인한 짓을 계속 자행했기 때문에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정당성을 부여
- 리비아에 대한 공습을 시작하면서 미국이 ‘제한적인’ 군사 개입을 강조한 반면, 영국과 프랑스는 카다피의 축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표출함.
- 리암 폭스 영국 국방장관은 “카다피는 영국 공군의 ‘합법적인 타겟’ 이라고 강조
 - 제라르 아로 주 유엔 프랑스 대사는 “우리의 군사개입 목적은 카다피의 축출”이라고 언급

- 미국, 영국, 프랑스 등 EU국가 대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장 팡 아프리카연합(AU) 사무총장,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3월 29일 런던에서 개최, ‘리비아 연락그룹’을 결성하기로 합의하고 ‘출구전략’을 가동하기 시작함.
 - 3월 30일 무사 쿠사 리비아 외무장관 영국으로 망명
 - 3월 31일 카다피 특사 영국 방문
 - 4월 1일 반군 정부 조건부 정전안 제시, 카다피 정부 거부

- 프랑스는 3월 10일 카다피에 저항하는 과도국가위원회를 가장 먼저 리비아의 합법정부로 인정하였으며, 3월 말 카타르, 몰디브, 이탈리아가 프랑스의 뒤를 이음.
 - 과도국가위원회는 3.23 제브릴(Abdul Mahmoud Jibril)을 임시 수상으로 임명

- 미국은 3월 27일 리비아에 대한 군사작전 지휘권을 NATO에 넘기는 한편, 카다피측과의 접촉을 통한 외교적 해결도 동시에 추진함.
 - NATO는 상주대표부 대사급 북대서양 위원회(NAC)를 개최, 작전권 인수를 만장일치로 가결
 - 클린턴 국무장관 3.27 유엔이 리비아에 특사를 보내 “카다피와 측근들이 물러나야 할 시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언급
 - 오바마 대통령, 반군 지원을 위한 비밀계획 승인

- 미국은 북아프리카 지역의 시위 사태를 해결하는데 딜레마에 빠져 있음.
 - 미국은 튀니지, 이집트에서 장기 독재자가 물러난 이후의 과정이

민주주의로 발전되고 리비아 사태의 해결을 통해 북아프리카-중동 지역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저항이 새로운 시민사회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지지

- 그러나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원유 공급시장의 안정, 알-카에다에 대한 공동 대처 등 기존의 핵심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대두

○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수행을 위해 리비아를 비롯하여 범아랍권 정부들과 대테러 협력망을 구축해왔으며 영국도 미국과 협력하여 왔으나 이 지역에서의 ‘민주화’ 저항에 따라서 테러 협력망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음.

- 알-카에다의 북아프리카 지부인 ‘이슬람 마그레브 알-카에다(AQIM)’가 리비아의 내란 과정에서 세력 확대 중

- 영국으로 망명한 무사 쿠사(Moussa Koussa) 전 리비아 외무장관은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 이후 체포돼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리비아 출신 알-카에다 대원 수피안 빈 쿠무 등이 동부 도시 테르나에서 반군 신병들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언급

○ 카다피의 정부군과 카다피를 축출하려는 반군 간의 내전이 진행 중이며, 국제사회는 유엔안보리 결의 1973호에 의거 NATO 사령부의 지휘 아래 프랑스, 영국 등 다국적군에 의한 카다피 진영의 군사시설, 정부시설 등에 대한 미사일 및 공중 폭격이 계속되고 있으나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

- 미국은 3.27 작전 지휘권을 NATO에 넘긴 이후 군사행동에서는

- 뒤로 물러선 상황이며 국제개발처(USAID)를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을 지속
- 2011년 7월말 현재 1백만 여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 한편 리비아는 1969년 카다피가 핵개발계획을 밝힌 후 핵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미국의 비·반확산정책의 핵심대상국가 중의 하나였음.
- 1979년 12월 5일 이란 혁명을 지지하는 리비아의 반미 시위대들이 수도 트리폴리 주재 미 대사관을 습격하여 방화한 사건이 발생, 이 사건을 계기로 미 국무부는 리비아를 테러지원국가(state sponsor of terrorism)로 지정하고 군수물자의 판매를 금지
 - 1980년 5월 6일 미국은 리비아 주재 외교관들을 소환하고 외교 관계를 단절
- 이후 리비아는 1988년 12월 미 항공기(Pan Am)의 스코트랜드 로커비(Lockerbie) 상공 폭파(270명 사망), 1989년 9월 프랑스 UTA 항공기의 북아프리카 니제르 상공 폭파(171명 사망) 사건을 일으킨 배후국가로 지목되어 1993년 11월부터 UN의 경제제재조치가 강화됨.
- 미국은 1996년 8월 「이란·리비아 제재법(ILSA)」을 발효(리비아 석유산업에 연간 4천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기업 제재 등)
 - 2001년 8월 「이란·리비아 제재법」 5년 추가 연장
- 그러나 영국은 1999년 7월 리비아와 외교관계 회복에 합의하였으며, 미국은 2002년부터 영국과 협력하여 리비아와의 핵 폐기 협상을 추진하였으며, 2003년 3월부터 12월까지 영국 해외정보국과 리

비아 정보국 간 비밀협상을 진행함.

- 이 과정에서 미국 CIA가 참여하여 협상하고, 만델라가 협상을 중재

○ 2003년 12월 19일 카다피가 대량살상무기 개발계획 포기를 전격적으로 선언하고, 리비아 외무부는 “리비아는 자유의지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지된 살상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기로 결정”한다는 성명을 발표함.

- 2004년 1월 IAEA 사찰단이 리비아를 방문하여 사찰을 시작하고, 2004년 3월 리비아가 추가 의정서에 서명

○ 2004년 4월 21일 미국은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였으며, 6월 28일 미국과 리비아 간 공식 외교관계를 복원하고 트리폴리에 미국의 리비아 주재 연락사무소를 개소함.

- 이후 2006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고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2008년 9월 5일 라이스 국무장관이 미 국무장관으로는 55년 만에 최초로 리비아를 방문하여 카다피와 역사적인 회담을 개최

○ 리비아는 국제적인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과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전 대통령 체포로 압박감을 가지게 된 상황에서 영국을 중재자로 미국과 협상하고 핵 포기에 대한 경제적 보상 및 외교관계 수립이라는 대가를 받음.

- 리비아는 막대한 석유자원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엔의 경제제재로 인해 국제적으로 고립된 가운데 국내경제가 침체되자 1998년 이후 기존의 사회주의 노선에서 실용주의 노선으로 정책 전환

I
II
III

마. R2P(인도주의적 보호책임)를 위한 국제적 개입

- 유엔의 목적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헌장 제1장 1조)’로서, 헌장은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제6장(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7장(평화의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행동), 제14장(국제사법재판소) 등의 관련 조항을 두고 있음.
- 유엔 헌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쟁의 해결은 기본적으로 ‘주권평등의 원칙’(2조 1항), ‘무력불사용의 원칙’(2조 4항), ‘내정불간섭의 원칙’(2조 7항)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유엔 헌장은 평화의 위협, 파괴 및 침략 행위의 존재에 관한 판단(39조)과 그 후속조치들(40~42조)에서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예외로 하고 있으며,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으로서의 무력행사(51조)에서 무력불사용의 원칙을 예외로 하고 있음.
- 인권 및 인도주의 문제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이후 유엔의 핵심 가치가 되었으나, 유엔 헌장은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결여함.²
- ‘국민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에 대한 유엔의 논의의 계기가 된 사건은 1994년 ‘르완다 사태’와 1998년 세르비아가 알바니아계 주민에 대한 ‘인종청소’ 사건이었음.

² 김학린, “유엔의 선택, 주권보장과 인도적 개입의 접점,”(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44차 전문가포럼 발제문, 2011. 4. 6), p. 12.

- 1994년 4월 르완다의 후투족 출신 대통령 피살사건으로 시작된 후투족과 투치족 간 종족분쟁으로 후투족이 투치족 80만 명을 학살
 - 1998년 세르비아에서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알바니아계 코소보 주민들과 세르비아 정부군간 유혈충돌을 계기로 세르비아가 10만 명의 알바니아계 주민을 학살
- 유엔 총회는 ‘개입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5년 9월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R2P 개념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음.
- “국제사회는 전쟁범죄, 대량학살, 반인륜 범죄, 인종청소로부터 위협 받는 개별 국가의 국민을 위해 평화적 수단이 통하지 않을 경우 집단적 무력사용(collective use of force)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선언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4월 28일 ‘무력 분쟁 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결의 16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2006년 6월 28일부터 연 2회씩 ‘무력 분쟁 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공개 토론을 열기로 함.
- 2006년 8월 31일 유엔 안보리는 수단의 다르푸르 사태와 관련 수단 정부가 다르푸르 지역주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무시하였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 1674호의 ‘무력 분쟁 시 민간인 보호’ 내용을 담은 결의 1706호를 채택함.
- 동 결의는 17,300명의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의 승인을 포함

- 2007년 7월 31일 26,000명의 유엔-아프리카연합군의 파견을 승인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69호가 채택되었으나, ‘(민간인) 보호의 책임’에 대한 언급은 결여
- 2006년 9월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 사태와 관련한 회의를 갖고, 2007년 1월 미얀마 군사정권의 인권 침해 및 강간, 성폭력 중단을 요청하는 결의안이 제안되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내정간섭’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했음.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2008년 베를린 연설에서 R2P를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조치”라고 규정하고 2009년 1월 12일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보고서를 발표하고, 2009년 7월 14일 R2P 관련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함.
 - 2009년 7월 23일 유엔 총회에서 R2P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고 R2P를 계속 검토할 것을 결의(A/RES/63/30)
- 북아프리카에서 시민 저항이 리비아에서도 발생, 반정부 시위가 내전으로 전환되고 카다피가 반정부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과정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반인도 범죄’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리비아 제재결의 1970호를 채택함(2.26).
 - ICC는 유엔안보리의 리비아 사태 회부에 따라서 리비아 사태에 대한 조사 착수를 발표(3.2)
- 그러나 카다피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강경해지고 반정부 시위대의 위세가 위축되면서 많은 희생자의 발생이 우려되면서, 유엔 안보리는 3.17 리비아에 대한 공습을 포함하는 내용의 유엔결의 1973호를 채택함.

- 29개의 항으로 구성된 1973호는 “국민보호에 대한 리비아정부의 책임을 재확인하고” 제4항에서 “유엔 회원국이 민간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모든 조치(all necessary measures)”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 리비아 전역을 대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6~12항)
 - 다만, 리비아 영토 어떠한 곳에서도 어떠한 형태의 외국군 주둔을 배제함(4항).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3.19 “리비아 제재는 국제사회가 국가 대신 국민 보호에 나서는 ‘국민보호책임’ 개념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강조함.
 - 유엔 안보리 결의 1973호에 근거, 미국·영국·프랑스 등은 다국적 연합군을 구성하여 3.19 리비아에 대한 공습을 결정함.
 - 미국·영국·프랑스 등 다국적 연합군의 카다피 세력에 대한 공습이 시작되면서 반정부 세력의 힘이 소생
 - 그러나 중국, 러시아 등은 리비아에 대한 군사공격에 유감 표시
 - 리비아에 대한 공습 결정의 근거가 된 안보리 결의 1973호는 R2P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서 국제사회가 인도주의 위기를 야기하는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의 규범이 되었음.
 - 그러나 유엔 현장의 내정불간섭 원칙과 충돌하며
 - 리비아 사태가 유엔 현장 7장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에 해당하는 조건인가의 문제를 제기

■ 유엔의 보호책임(R2P)

- R2P는 국가 주권이 단순히 영토와 국민을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며, 이를 토대로 주권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능력이나 의지를 결여하여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인권유린 등 반인륜적 범죄가 자행되는 경우, 국제 사회는 개입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최후 수단으로 필요하면 무력 개입도 해야 한다는 규범적 개념임.
 - R2P 개념은 집단학살과 인종청소가 자행된 르완다와 코소보 사태 등에서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적 개입에 실패했다는 반성에서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이 내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국제적 합의나 기준 마련을 촉구, 캐나다 정부가 조직한 국제위원회에 의해 2001년 제시
 - 핵심은 인도적 개입의 기준과 범위 등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군사적 수단에 앞서 정치·경제·사회적 수단으로 인권유린의 대량살상의 근원 해소를 목표
 - 유엔 총회의 '개입과 국가주권에 대한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ICISS)' 성과를 바탕으로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R2P 개념을 유엔의 활동원칙으로 채택(유엔정상회의 결의문, para 138-140, 2005)

[표 2]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의 사례 비교

	시민들의 저항	엘리트층의 성격과 대응	SNS 등 뉴미디어 역할	국제정치적 역학관계	R2P를 위한 국제적 개입
튀니지	시민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	집권여당(입헌민주연합)의 장기권력 독점 정치적 대안세력부재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 블로그를 통해 정보의 확산	프랑스, 미국 등은 경제적 이익과 평화적 시위 지지 입장 사이에서 신중한 입장 견지 사후적으로 정권교체 환영	국제사회의 개입 이전 상황 종료
이집트	시민들의 시위는 카이로의 일부 지역에 한정	군부와 무바라크 대통령의 권력투쟁 군부가 시민들의 시위를 활용하여 무라라크 대통령 축출 군사평의회가 비상통치권 보유	인터넷 등 SNS와 사람을 통한 메시지 전파가 중요 역할	미국 등은 이집트의 정권교체가 이슬람 급진세력 등장이나 테러집단과 연결될 가능성 우려 사후적으로 정권교체 환영	국제사회의 개입 이전 상황 종료
리비아	시민저항이 부족간 전쟁으로 발전	카다피의 친척 및 부족의 충성파들이 군부 및 정부의 요직 독점 시민저항이 발생하자 각료, 군장성, 외교관 등 엘리트 층이 이탈	SNS보다 부족내 정보전달 부족내 지도력 등이 중요	미국: 중동지역의 안정, 원유공급시장의 안정, 알 - 카에다 등 테러집단에 대한 협력망 유지 등을 고려하여 리비아제재에 찬성하면서도 제한적 군사개입 지지 프랑스, 영국: 리비아의 원유 공급망 확보, 중동지역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해 리비아에 대한 적극적 개입 입장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리비아에 대한 국제적 개입에 반대 입장	R2P에 근거,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70 (2011.2.26) 및 1973 (2011.3.17) 채택, 리비아에 대한 공습 근거 마련

Ⅲ. 북한의 대응과 시사점

1. 북한의 대응

가. 대내적 대응

- 중동의 정치 변동 상황 전개에 맞추어 북한당국은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음.
 - 주민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치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동시에 취해진 것으로 분석

- 먼저 주민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음.
 -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 이후 예견되었던 대대적인 주민단속 취소
 - 양강도의 경우 2월 초부터 보위사령부 검열대가 주민단속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고 2월 16일이 지나서부터 집중적인 검거와 단속이 예견되었으나 검열반 철수
 - 또한 김정일 생일 이후로 예견되었던 마약청산을 위한 교환검열도 전격 취소
 - 1월 20일에는 생계형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교양사업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인민보안부 명의의 지시문이 각 지방 보안서에 하달

- 아울러 주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음.
 - 2월 중순경 각 대학에 보안원을 4명씩 추가로 배치해 대학생들의 기숙사생활까지 주야로 감시, ‘기동타격대’, ‘순찰대’, 노동자규

- 찰대' 인원을 대폭 늘려 순찰활동 강화
- 또한 2002년 이후에는 거의 운영되지 않던 인민반 초소를 보수하고 매일 저녁 한개 인민반에서 3명씩 경비조를 구성해 야간경비를 하도록 감시활동을 강화
 - 2월 초 김정일의 친필지시 하달³에 의해 3월에 인민보안부 산하에 '특수기동순찰대' 조직: 각 도에 200명, 시에는 100명으로 구성, 주로 경비병 출신으로 구성, 도에는 헬리콥터 한 대를 배치하고 착륙장을 신설, 주요 임무는 폭동 진압

나. 대외적 대응

- 2011년 1월 15일 튀니지 사태 발생 이후 이집트 사태(2.28) 때까지 북한의 공식 반응은 없었음.
- 3월 들어 내정간섭 관련 대미 성토에 이어 미국의 리비아 군사공격에 대한 비난 논조가 등장하였음.
 - 미국의 전횡과 내정간섭행위가 “도처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 아르헨티나의 불법물자 반출 미국수송기 억류사건, 우크라이나 대선 간섭, CIA요원들의 파키스탄인 살인사건 등⁴
 -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제국주의의 침략적, 약탈적 본성과 생존 방식을 똑똑히 알고 그와 비타협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야 한다”고 ‘反帝자주투쟁’을 선동⁵

³ 임정진, “북, 김정일 지시로 폭동진압 기구 발족,” 『데일리 NK』, 2011년 2월 23일.

⁴ “통할 수 없는 미국의 전횡과 내정간섭행위,” 『로동신문』, 2011년 3월 3일.

⁵ “변하지 않는 제국주의의 침략적, 약탈적 본성,” 『평양방송』, 2011년 3월 18일.

- “미국의 대리비아 군사공격(3.19)은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영토완정에 대한 난폭한 침해, 반인륜범죄로 즉각 중지”를 촉구하고 “자위적 국방력강화 정당성”을 강조⁶
- 이후 북한 당국은 ‘반제투쟁’ 선동을 지속하면서 군사력 강화를 위한 선군정치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함.
 -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 야망, 반평화적책동(美의 ‘독수리 합동연습’과 대북정책, 일본의 강진과 방사능, 이스라엘의 대팔레스티나 압박)을 짓부셔버려야 한다”⁷
 -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횡포에 대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군력과 총대 강화 뿐”⁸
- 북한 당국은 북아프리카 및 중동사태를 미국의 국제적 ‘관여(개입)’ 정책에 대한 비판과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통한 군사력 강화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계기로 활용함.
 - “미당국자들이 쓰고있는 수법의 하나인 《관여》정책은 미국이 모든 나라와 지역문제에 간섭하여 지배, 통제하고 세계를 그들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게 하려는 기도의 발로”⁹
 - “미국이 떠들기 좋아하던 《리비아핵포기방식》이란 바로 《안전담보》와 《관계개선》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상대를 얼려넘겨 무장해제를 성사시킨 다음 군사적으로 덮치는 침략방식”이라고

⁶- “북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2011년 3월 22일.

⁷- “지배주의 세력의 평화파괴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2011년 3월 31일.

⁸- “자주성 수호의 믿음직한 담보,”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2011년 4월 6일.

⁹- 『로동신문』, 2011년 2월 6일.

하면서, “선군의 길은 천만번 정당하며 그 길에서 마련된 자위적 국방력을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없이 소중한 억제력”이라고 주장¹⁰⁾

- 또한 북한은 리비아 등 중동 ‘민주화’ 사태를 ‘색깔혁명’이라고 표현하면서 체제의 공고성을 강조하고 있음.
 - “색깔혁명은 제국주의세력의 선전심리전,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아내지 못하여 무너진 동유럽나라들과 비슷한 사태”라며, “제국주의자들의 선전심리전에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¹¹⁾

2. 시사점

가. 시민저항 가능성

- 현재 북한에서 시민혁명을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요인은 극심한 식량난과 전반적인 인민경제의 마비현상임.
 - 지금까지 북한 당국은 식량배급을 독재체제유지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해 왔으며 주민들의 손발을 묶어놓는 수단으로 활용
 - 그러나 극심한 식량난으로 식량배급제가 허물어지게 되자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 강구
 - 식량난으로 북한체제의 일각이 이미 허물어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시사

¹⁰⁾ 『조선중앙통신』, 2011년 3월 22일.

¹¹⁾ 『평양방송』, 2011년 3월 10일; 『로동신문』, 2011년 4월 2일.

- 북한의 민주화 혁명을 촉진하는 또 다른 요인은 북한 주민들의 사상의식의 근본적인 변화 추세임.
 - 1990년대 초반부터 구소련이 붕괴되고 중국이 급격히 자본주의화 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주체사상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기 시작
 - 북한 주민들의 사상적인 불평, 불만이 비록 세력화되지는 못해도 점차 지하화하면서 확산될 것으로 전망

- 또한 중동 민주화 소식이 여러 가지 간접적 경로를 통해서 북한주민에게 인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대학·시장에 유입된 정보가 청년, 대학생, 도시 주민층으로 유포
 - 대중 무역상인, 밀수업자, 중국 친인척방문자 등을 통해 입소문으로 확산
 - 대북라디오 방송 청취: KBS 한민족 방송, 극동방송, RFA, VOA, 민간대북방송 등
 - 대북풍선 전단지
 - 2만 여명의 한국 거주 탈북자와 북한 주민의 휴대폰 통화 등

- 그러나 북한 당국은 정보차단 및 대내통제를 통해 중동 민주화의 여파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 당·보위부·군 감시체제 작동
 - 대학에 보안원 증가 배치, 휴대폰 단속, 북·중국경 통제 강화
 - 도 보안부에 소요사태 대비 지침 하달
 - 내부강연회, 청년층 조직생활 강화
 - 연좌제 등 처벌에 대한 주민의 공포
 - 북한 내 반체제 단체·인물 등 구심점 부재 등

- 더욱이 북한에서 소요사태 발생시 군부가 소요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저항이 확산되어 민주화 혁명이 초래되기는 어려울 것임.
 - 주민 소요사태가 즉각 발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경찰 또는 군대가 동원되어 진압할 가능성 농후
 - 북한군대는 기본적으로 체제 수호자의 역할
 - 만약 북한에 개혁개방을 요구하는 정치·사회적 세력이 형성되어 기존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존체제 유지를 위한 보수적 군부쿠데타 발생도 가능

- 이렇게 볼 때, 단기간 내에 북한에서 대규모의 주민 소요사태가 발생하고 체제가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난, 주민불만, 외부 정보 유입 등 체제변화의 구조적 요인이 누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김정일의 유고, 우발적 사고 등에 의해서 체제변화 촉발요인이 발생할 경우, 북한에서 시민소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부패, 빈부격차에 대한 주민 불만 누적
 - 특히 청년, 대학생, 노동계급, 인민군 하급부대의 불만 고조
 - 김정일의 유고는 권력엘리트의 갈등과 동요 촉발
 - 대형사고 또는 우발적 사고로 주민불만 폭발 등

나. 엘리트 갈등 가능성

- 북한의 경우 권력교체기에 신-구엘리트 간 갈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권력세습과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정일 충성파와 김정은 충성파의 경쟁 대두
- 2009년 1월 이후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과정의 일환으로 김정은 친위세력 형성 및 새로운 통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김정은이 자기 친위세력을 육성하자면 불가피하게 기존세력을 숙청하여 빈자리를 만들어야 함.
 - 새로운 통치 재원을 마련하자면 기존세력이 차지하고 있는 이권을 뺏거나 새로운 사업 창출이 필요
- 이와 관련하여 ‘선군정치’ 과정에서 군부와 그 주변 세력이 북한에서 돈주와 부자로 등장한 점이 주목됨.
 - 장성택, 최용해 등은 선군시기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세력
 - 특히 장성택은 2008년 난립한 군부 무역회사들을 정리하는데 중요한 역할 수행
 - 화폐개혁도 북한 경제계의 세력개편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으로 분석
-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으로 ‘선군시대’의 기득권 세력의 일부가 몰락했음.
 - 김일철, 오극렬, 조명록, 김영춘, 이제강 등의 몰락
 - 사회적으로는 젊은 세대를 주력간부로 등장시키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

- 이집트와 튀니지의 경우, 민간 소요가 발생하면서 최고 지도자가 원성의 대상이 되자, 군부와 집권당의 기득권 세력이 비판 대상인 대통령을 축출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성공하였음.
 - 루마니아의 차우체스쿠의 몰락도 같은 유형

- 북한의 경우도 소요사태가 발생하면 김정일·김정은이 원성의 핵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럴 경우 기득권 세력은 김정일/김정은만을 제거하고 자신들은 살아남는 꼬리 자르기 수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이집트와 튀니지가 다른 아랍 국가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 중의 하나는 군대가 민간 시위를 진압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임.
 - 이는 군대가 지도자의 사병화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우, 군대의 사병화 또는 종족 균열 등의 문제로 군대가 민간인 시위대의 무력 진압에 동원
 - 북한의 경우 군대가 사병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호위 총국 등 정규군과 구별되는 충성스러운 사병집단이 존재하며, 이들이 민간시위대의 무력 진압에도 동원될 것으로 예측

- 북한에서는 정권 말단 요원과 상인 또는 일반 주민 사이에 말다툼 또는 몸싸움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소규모 군중 항의 사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 정권을 정치적으로 위협할 만한 군중 소요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우발성 소요가 있을 수 있지만, 무력으로 조기 진압될 것으로 예측
 - 다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엘리트 집단에 큰 충격을 줄 것

이며, 내부 분란 증가 또는 정책 방향 선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중동지역의 소요사태는 북한 내부의 엘리트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중동지역의 반정권적 소요사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북한의 주요 엘리트들이 늘어감에 따라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약화
 - 각종 정책(예, 개혁·개방 정책 관련)의 결정 및 이행과정에서 엘리트들간 의견 충돌이 빈발해 지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지도부의 엘리트 숙청과 같은 강경조치 실시
 - 지도부의 강경조치는 엘리트들의 반 정권적 행태를 촉발

- 그러나 북한에서 집단적 분파주의와 같은 엘리트 갈등은 당분간 자리 잡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김정은 세습체제 구축과정에서 북한은 당대표자 대회를 통해서 중앙당을 정상화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하였으나 전원회의, 정국 등을 통한 집단적 정책결정 가능성은 희박

- 정치적 파벌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군부 내 파벌도 존재할 수 없음.
 - 군부는 획일적 정치도체제를 보호하는 전위대의 역할 수행
 - 북한 군부의 이러한 속성은 선군정치가 자리 잡고 난 이후 더욱 강화

- 그러나 국제적 압력 완화 및 경제난 해결을 위해서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할 경우, 노동당의 집단적 협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정치적 분파주의가 생겨날 수는 있음.
 - 예를 들면 경제개혁 및 정치적 다원화를 지지하는 분파, 경제개

혁·개방을 지지하는 분파, 폐쇄정책을 고수를 주장하는 분파의 등장

- 각 분파는 군지휘관들을 자기편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군부를 분열시키게 될 것이며 결국 북한 노동당 내의 분파주의가 군부로 확산

다. SNS 등 정보자유화 실태

- 북한에서 중동 시민혁명의 촉매제 역할을 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의 보급이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불만을 공유하고 시위를 기획·전파할 수 있는 정보망이 미약함.
 - 그러나 SNS와 같은 통신수단이 없어도 정보확산 가능
 - 정보확산 방법은 사회마다 다르며, 아랍권에서 SNS를 통해 정보가 확산되었다면 북한의 경우는 다른 수단을 통한 정보확산 가능
 - 북한 거주시 남한이나 중국의 소식을 접하였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감안하면, 북한 내에서도 정보확산은 가능
- 북한에서는 중동과 같은 SNS가 아니라 라디오를 통해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가능할 수 있음.
 - 탈북자들의 22.8%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외국의 소식을 접했다는 조사결과
 - 북한의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남한이나 외부의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밀반입된 라디오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

라. 관련국 예상 입장

■ 미국

- 미국은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 해결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바, 북한 소요사태 발생 시 북한 핵무기의 안전관리와 인권침해 가능성이 대해서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들(소요사태에 대한 무력수단 사용 등)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북한 주민 인권보호의 명분으로 북한사태에 대한 국제적 개입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됨.
 - 유엔 안보리에서 R2P 적용문제를 거론하는 한편, 이를 위해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EU 등과 협력

■ 중국

- 중동지역의 시민저항은 중국지도부에게 체제안정 및 권력 유지와 관련 매우 심각한 도전 요소로 인식됨.
 - 중국 지도부에게는 중국 사회의 안정과 단합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 발전 전략을 위협하는 요소
- 중동지역의 ‘민주화’ 시위 초기부터 중국은 관련 소식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면서 방어적 입장에서 대처하였음.
 - 중국은 인터넷 등 정보 전달매체에서 관련 사항을 통제
- 중국의 맹건주(孟建柱)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이 방북(2.13-15), 북한

측과 튀니지,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바람을 차단하기 위한 양국 간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 문제를 협의하였음.

- 북한 소요사태 발생 시 중국은 그 여파가 중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력하면서 국제사회의 개입에는 반대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유엔 안보리에서 R2P 논의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개입에 반대 입장표명 예상

■ 러시아

- 러시아는 북한 소요사태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나 북한정권의 독재행위가 국제적으로 이슈화될 경우 유럽 및 미국과 행보를 같이 할 가능성이 큼.
 - 리비아의 카다피 독재정권을 부정하는 등 점차 유럽화되어 가고 있는 러시아의 외교적 행태 영향

■ 일본

- 북한 소요사태 발생 시 일본은 미국과 같은 보조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과정에서 핵무기의 안전관리, 무력도발 등 우려
 - 인권보호를 위한 R2P 제기 시 국제적 개입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

마. R2P를 위한 국제적 개입 가능성

- 향후 북한에서 소요사태 발생시 보안기구나 군대에 의한 무력진압이 발생할 경우, R2P에 의한 국제적 개입 가능성이 있음.
- 북한 군대가 민간인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여 대규모 인명이 살상되거나 정치범수용소의 수감인원에 대해 비인도적 조치를 취한다면, ‘인도에 반한 죄’나 ‘집단살해죄’ 혐의로 유엔안보리에 의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가 가능함.
 - 유엔 안보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70호(2011.2.26)에 의해 리비아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
 - 국제형사재판소는 카다피와 아들, 정권 핵심인사를 대상으로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공식 수사 개시(2011.3.3)
-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을 결정한 유엔안보리 결의 1973호의 근거는 ‘반인륜범죄’에 대한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인 바, 이를 계기로 독재자가 자국민에 대해 반인륜범죄를 자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국제법적 관행이 정립되었음.
- 이는 향후 북한에서 반인륜범죄가 발생할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 북한지도부에 대해 간접적인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보호책임’ 논리를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유엔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역할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임.

부 록

[부록 I] 북아프리카·중동지역 시위 유형 및 전개과정

(2011년 7월 15일 현재)¹²

나라	시작일	시위종류	귀추	사망자	결과
튀니지	2010. 12.18	- 모하메드 부아지지의 자기희생 - 전국적 시위 - 공공시설 점거	- 벤 알리 대통령 및 간누시 총리 축출 - 정치경찰 및 과거 여당의 해체 - 정치범 석방	223명 이상	혁명
알제리	2010. 12.28	- 자기희생 - 대규모 반정부 시위 - 소요사태 - 교통차단	- 19년간의 비상사태 해제	8	소규모 시위
레바논	2011. 01.12	- 반정부 시위 - 전투경찰과 시아드 하리리 지지자 간의 충돌	- 리비아 과도인민 위원회 구성	0	소규모 시위
리비아	2011. 01.13	- 전국적 반정부 시위 - 무장 소요 - 도시 점거 - 내전	- UN 결의 1974호 - NATO·카타르·UAE 의 리비아 반군 지원을 위한 군사개입	2,000명 이상	무력 분쟁 (내전)
요르단	2011. 01.14	- 소규모 반정부 항의 시위	- 압둘라 2세 왕의 리파이 총리 파면 및 내각 해산	1	정권 교체
모리타니	2011. 01.17	- 자기 희생 - 반정부 시위		1	소규모 시위

¹²-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참고(<http://ko.wikipedia.org>, 검색일: 2011년 4월 29일).

나라	시작일	시위종류	귀추	사망자	결과
수단	2011. 01.17	- 소규모 반정부 시위	- 바시르 대통령의 2015년 차기 선거 불출마 선언 - 카부스 술탄의 경제적 양보	1	소규모 시위
오만	2011. 01.17	- 대규모 반정부 시위	- 여러 장관 파면 - 오만에서 선출된 입법 기관의 입법권 승인	2~6	정권 교체
예멘	2011. 01.18	- 전국적 반정부 시위 - 소요사태	- 전인민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총사퇴 - 살레 대통령, GCC의 30일 이내 퇴진 중재안 수용	120~150	정권 교체
사우디아라비아	2011. 01.21	- 자기희생 - 소규모 항의 시위 - 동부지방의 중규모(100-1000명) 반정부 시위	- 압둘라 왕의 경제적 양보 - 2011.9.22 남성만의 지방 자치선거 개최에 합의	?	소규모 시위
이집트	2011. 01.25	- 자기희생 - 전국적 반정부 시위 - 공공시설 점거 - 관공서 건물 공격	- 무바라크 대통령 및 아마드 샤피크 총리 축출 - 이집트군 최고위원회의 권력 인수 - 헌법 정지 및 국회해산 - 주 보안군의 해체 - 정치범 석방	684~840	혁명
시리아	2011. 01.26	- 자기희생 - 대규모 항의 시위	- 지방 주지사 파면 - 정권 총 사퇴	80명 이상	정권 교체

나라	시작일	시위종류	귀추	사망자	결과
지부티	2011. 01.28	- 소규모 반정부 시위 - 주요 공공시설 점거	- 야당 지도자 검거	2	정권 교체
모로코	2011. 01.30	- 자기희생 - 소규모 반정부 시위 - 건물 공격	- 모함마드 6세 왕의 정치적 양보 - 법 개정에 대한 국민 투표	?	소규모 시위
이라크	2011. 02.10	- 자기희생 - 대규모 반정부 시위 - 소요 사태 - 관공서 공격	- 말리키 총리 3기 선거 입후보 불출마 - 지방 주지사 및 지방 당국자들의 총사퇴 - 하마드 왕의 경제적 양보	?	대규모 시위
바레인	2011. 02.14	- 대규모 항의 시위 - 공공시설 점거	- 정치범 석방 - 여러 장관 파면 - GCC가 바레인 정부의 요청에 따라 중재	29	대규모 시위
이란	2011. 02.14	- 대규모 반정부 시위	- 야당지도자 검거	3	소규모 시위
쿠웨이트	2011. 02.18	- 반정부 시위 - 전투경찰과 베두인 민족 간의 충돌	- 정권 총 사퇴	0	소규모 시위
서사하라	2011. 02.20	- 소규모 반정부 시위		1	소규모 시위

[부록 II] 주요 국가의 사태 전개 일지

1. 튀니지 사태 일지(2011.1.05-1.14)

일 시	내 용
2010. 12.17	부아지지 분신기도 - 26세 대졸 청년 모하메드 부아지지, 튀니지 중부 시디 부지드 지역에서 청과물 노점 운영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된 뒤 분신자살 기도
12.19	튀니지 시위사태 발발 - 시디 부지드 지역에서 고실업률 항위 시위, 경찰과 충돌
12.24	시위대 사망자 발생 - 시디 부지드 인근 멘젤 부자야네 지역에서 경찰과 시위대 충돌, 시위대 2명 사망
2011. 1.5	부아지지 사망 - 2010.12.17 분신한 청년 모하메드 부아지지 사망
1.8-10	시위사태 확산 - 중부 카세리네 지역에서 시위 확산 - 튀니지 노동총동맹, 시위 중 사망자 50여 명 발생 주장 - 정부는 시위대 21명 사망했다고 발표
1.10	벤 알리 대통령의 유화책 발표 - 지네 엘 아비디네 벤 알리 대통령, 시위사태가 폭도에 의한 테러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 - 일자리 30만개 창출 유화책 발표
1.11	시위사태 튀니스로 확산 - 반정부 시위, 수도 튀니스로 확산 - 튀니스에서 시위대-경찰 첫 충돌

일 시	내 용
1.12	<p>시위사태에 대해 군 병력 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위 강경진압 책임 물어 내무장관 경질 - 튀니스에 통행금지 시행, 군 병력 배치 - 시민단체, 시위현장에서 8명 추가 사망 주장
1.13	<p>벤 알리,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 알리 대통령, 2014년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 - 튀니스 병원 내 의료진, 보안당국 총격으로 13명 추가 사망했다고 주장 - 알-카에다 북아프리카 지부(AQIM), 벤 알리 정권 전복 촉구
1.14	<p>벤 알리, 결국 하야 및 망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 알리 대통령 하야 촉구 시위 전국 확산 - 벤 알리 대통령, 내각 해산 뒤 6개월 내 조기 총선 실시 발표 - 모하메드 간누치 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며 과도정부 출범 - 벤 알리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

2. 이집트 사태 일지(2011.1.17-2.11)

일 시	내 용
2011. 1.17-18	튀니지 사태, 이집트에 영향 - 튀니지 시민혁명 영향으로 이틀 동안 3명 분신
1.25	이집트 시위사태 발발 -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 및 정치·경제 개혁 요구 대규모 시위 시작 - 시위대 3명, 경찰 1명 등 4명 사망
1.26	사망자 및 구금자 증가 - 경찰 집회금지령 불구 이틀째 시위로 2명 추가 사망, 860명 체포
1.27	이집트 국내외적에서의 압박 - 체포자 1천 명, 사망자 7명으로 증가 -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급거 귀국 - 미국 백악관, 이집트에 ‘정치개혁’ 촉구 - 야권인사 20명 검거, 인터넷 통제
1.28	엘바라데이 가택연금 - 금요일기도회 직후 전국적 시위로 경찰과 충돌, 최소 26명 사망 - 엘바라데이 가택연금 - 미국, 이집트 원조정책 재검토 압박
1.29	무바라크, 민주화 요구 외면 - 무바라크 대통령 TV연설, 내각 해산과 정치개혁 천명 그러나 최측근 인사들을 부통령과 총리에 임명 - 이집트 당국, “이틀간 시위로 62명 사망” 확인 - 알자지라, 최소 95명 사망 보도
1.30	알자지라 카이로 지국 폐쇄 지시 - 이집트 정보부, 알자지라 카이로 지국 폐쇄 지시

일 시	내 용
1.31	<p>안팎에서 무바라크 하야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집트, 팔레스타인 국경통과소 봉쇄 - 시위대 카이로 중심가 점거 - 군부-부통령도 무바라크 대통령 하야 요구 - 국회의장, 의회해산 가능성 경고 - 무바라크 대통령, 신임총리에 야당과 대화 지시 - 미국 백악관, “이집트 미래 이집트 국민이 결정” - 무디스, 이집트 신용등급 하향 조정
2.1	<p>안팎에서 무바라크 하야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집트군, “시위대에 무력사용 않겠다” 선언 - 술레이만 부통령, “야당과 대화 않겠다” 선언 - UN, ‘이집트 시위사태로 300명 이상 사망’
2.2	<p>반정부 시위 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엘바라데이와 첫 접촉, 정부 특사 급파 - 최대 반정부 시위 100만 명 행진 - 무바라크, 차기 대선 불출마 표명 - 이집트군, 시위대에 “일상 복귀” 호소
2.3	<p>무바라크, 권력이양 요구 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바라크 대통령, ‘즉각 권력이양’ 요구 거부 - 친-반 무바라크 시위대 충돌…최소 7명 사망 - 술레이만 부통령, 야권과 대화 개시
2.4	<p>미국의 압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상원, 이집트 과도정부 촉구 결의안 채택
2.5	<p>안팎에서 무바라크 하야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집트 총리, 시위대 강제해산 안 해 - 오바마 대통령, “이집트, 당장 권력이양 시작해야”

일 시	내 용
2.6	무바라크, 견재 과시 - 무바라크 대통령, 경제장관회의 주재 견재 과시 - 야권, 정권교체 협의 25인 위원회 구성
2.7	시위단체, 협상 거부 - 정부-야권, 개헌위원회 설치 등에 합의 - 시위주도 단체, “정부와 협상 거부”
2.9	시위대, 의회 해산 요구 - 시위대 의회 앞까지 진출, 의회 해산 요구 - 술레이만, “시위 더 이상 못참겠다…군부 쿠데타 가능성” 경고
2.10	무바라크, 즉각 권력이양 거부 - 무바라크, 대 국민 연설, “오는 9월까지 권력이양” 조기사퇴 거부
2.11	무바라크, 권력 이양 - 이집트군, “술레이만 부통령에게 권력 이양 지지” 발표 - 술레이만, “무바라크 사퇴 결심, 군에 권력 이양” 발표
4.13	무바라크와 아들, 구속 - 이집트 검찰, 무바라크 전 대통령과 두 아들 구속

3. 시리아 사태 일지(2011.1.26-7.15 현재)

일 시	내 용
2011. 1.26	<p>튀니지, 이집트 시위사태가 시리아에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리아에서 근 10년간 일어난 시위 중 가장 큰 규모의 반정부 시위 발생 - 주변 국가들의 반정부 시위에서 영향 받은 것으로 하페즈 알-아자드 전 대통령의 30년간 통치 이후 그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바샤르 알-아자드 현 대통령이 10년간 통치하는 것에 대한 불만 폭발 - 이 날 발생한 시위로 12명이 사망
1.31	<p>바샤르 알-아자드 대통령, WSJ와의 인터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샤르 알-아자드 대통령이 WSJ와의 인터뷰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언급을 했으나 시리아는 다른 국가의 시위 사태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2011년 1월부터 시리아 정부는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 누적
3.15	<p>시위의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 다마스쿠스 내 하미디야 시장에서 시위, 200여명 참가 - 알레포, 다라 등 다른 도시로 시위 확산
3.16	<p>저명인사들도 함께 시위 참여 및 체포·구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십 명의 시위대가 다마스쿠스의 내무부 건물 앞에서 체포된 정치범들의 석방을 요구, 그러나 경찰은 이를 강제 해산 및 참가자 체포 - 시위대 중에 따입 티지니 박사(저명한 시리아 사상가)와 사히르 알 아티시(여성인권운동가), 마젠 다르위시(시리아 언론자유운동 총재), 나히드 바드위야(작가)도 체포 - 경찰은 티지니 박사와 마젠 다르위시를 몇 시간 뒤 석방했으나 나머지는 구금

일 시	내 용
3.17	시리아 경찰, 시위 해산 - 경찰, 체포된 사람들의 가족이 참가한 내무부 건물 앞의 시위 해산
3.18	시리아 경찰, 시위 해산 - 경찰, 다마스쿠스의 우마이야 대사원 근처 시위대 흠스, 바니아스, 다라 등 다른 도시에서 일어난 시위대를 해산 - 다라시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2명 사망
3.19	남부 도시 다라에서 시위 확산 - 다라시에서 사망한 두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한 시민들이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 - 다라에서 15명의 학생들이 벽에 반정부 문구를 썼다가 체포되는 일이 발생, 이로 인해 시위 확산
3.20	다라시에서 시위 확산 - 다라시에서 수천 명이 참가한 시위 지속 - 경찰의 총격으로 시위대 4명 사망, 경찰의 최루탄 및 실탄 사용으로 수백 명이 부상
3.21	다라시 인근에 시리아군 주둔 -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라이드 알 쿠라드(23)와 다른 네 명의 장례식이 다라에서 개최 - 지역 책임자들이 시위의 유혈 진압 이후 안정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군대가 다라시 인근에 주둔
3.22	UN·EU, 시리아 사태에 대한 정부의 태도 비난 - 다라시 인근, 나와 마을에서 수백 명이 자유 요구 시위 - UN 인권위원회, 평화적 시위대에 대한 폭력, 특히 실탄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 -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캐서린 애쉬튼, 시리아의 시위대에 대한 무력진압비난 및 그에 관련된 사람의 처벌 및 국민의 합법적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

일 시	내 용
3.23	<p>시리아 경찰, 시위대에 발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리아 경찰, 데르아의 오마리 모스크 인근의 수천명의 시위대에게 실탄을 발사, 최소 6명이 사망, 수십 명 부상 - 정권은 이 일의 배후에 “무장집단”이 있다고 주장
3.24	<p>존엄의 금요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라에서 시위대 사망자가 15명 상회 -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파이살 쿨썬 다라주의 주장관 해임
3.25	<p>전국적으로 유혈충돌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라를 포함한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유혈 충돌이 발생하여, 많은 사상자 발생 - 시리아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무장집단”에게 전가 - 세이다나야(다마스쿠스 인근 마을) 교도소에서 260명의 죄수(대부분 이슬람주의자들) 석방
3.26	<p>SNS로 국민저항을 촉구하는 글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상으로 다라시를 구하기 위해 시리아 전역이 “국민 저항”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글이 퍼짐. - 몇몇 부대가 시위가 확산된 라타끼야시(아사드 정권의 핵심 기반 세력인 알라위파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로 진군하고, 진압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 분노한 시민들은 라타끼야시의 바쓰당 본부 두 곳을 방화
3.27	<p>시리아군, 다라시와 라타끼야시로 집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싸이아 슈으반 대통령 대변인, 1963년 이후 계속된 비상사태 해제 결정 발표 - 군대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다라와 라타끼야로 집결
3.28	<p>시리아군, 시위대 공포탄 발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대가 다라시의 시위대를 향해 공포탄 발포

일 시	내 용
3.29	바샤르 대통령, 개각 - 바샤르 대통령, 나지 알 오프리 내각의 사임 수용 및 새 내각 임명
3.30	바샤르 대통령, 시위 이후 최초 대국민 연설 - 바샤르 대통령, 시위 시작 이후 최초의 대국민 연설에서 아랍 혁명을 장악하려는 외부 세력에 대해 언급 - 라타끼야시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 지속
3.31	무바라크와 아들, 구속 - 바샤르 대통령, 시리아 내 쿠르드인의 상황, 비상사태 해제, 다라시와 라타끼야시의 사망자 조사를 위한 세 개의 위원회 구성 지시 - 미국, 자국민에게 시리아를 떠날 것을 권유
4.1	순교자의 금요일 - 자유와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다마스쿠스와 근교의 두마, 라타끼야, 바니야스, 다라, 앓 사나미안(다라주), 아무다, 라스 알 아인(이성 알 하사카주) 등에서 지속 및 확산 - 경찰의 총격으로 수십 명이 사망하고 더 많은 수가 체포 - 쿠르드인이 대규모로 거주하는 북부 시리아의 까시블레, 최초로 시위 발생
4.2	두마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 - 두마에서 시위가 발생, 경찰이 시위대를 체포
4.3	바샤르 대통령, 새 총리 임명 - 바샤르 대통령, 아딜 사파르 전 농업부 장관을 새 총리로 임명
4.5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 - 다라에서 총파업 실시 - 시리아 방송, 리프 다마스쿠스 주에서 두 명의 경찰이 알 수 없는 무장집단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보도 - 시리아 인권협회, 외국인 기자나 시리아인 기자를 가리지 않고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발표

일 시	내 용
4.6	<p>시리아 정부, 이슬람주의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리아 정부, 여교사의 니깁 착용 금지 법안을 폐지 및 카지노 폐쇄 - 위 조치는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이슬람주의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함이라는 분석
4.7	<p>바샤르 대통령, 쿠르드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샤르 대통령이 알-하사카주의 외국인으로 등록된 사람들(쿠르드인)에게 시리아 국적을 부여하는 법을 발표 - 라카시에서 24명의 쿠르드인 석방
4.8	<p>저항의 금요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리아의 많은 도시와 마을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다라의 바쓰당 본부가 화재로 소실
4.9	<p>엠네스티, 3주간 사망자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엠네스티, 지난 3주간의 사망자는 최소 171명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 - 시리아 경찰, 시위 발생 지역의 경계를 강화
4.10	<p>바니아스시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니아스시(라타키야 남쪽의 항구도시)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4명의 사망자와 20명이 넘는 부상자 발생
4.11	<p>바니아스시에 탱크 집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탱크가 바니아스시에 집결 - 수백 명의 학생들이 다마스쿠스대학교에서 시위
4.12	<p>UN 고등인권판무관실, 경찰 실탄 사용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이 바니아스시 인근의 바이다 마을을 포위, 공격 - 알레포 북부의 아인 알-아랍 마을에서도 정치범의 석방과 정당설립의 자유를 촉구하는 시위 발생 - UN 고등인권판무관실, 경찰의 실탄 사용 비난

일 시	내 용
4.13	<p>시리아 경찰, 시위 발생 지역 포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배후에 무장세력이 있음을 주장하며 바니야스시와 인근의 바이다와 같은 마을들을 포위 - 시리아 제2의 도시 알레포의 대학교 학생들, 바니야스시와 다라시 시위대에 동조하는 시위 - 휴면 리서치, 경찰이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가로 막고 있다고 주장
4.14	<p>수웨이다에서 시위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라시 인근 수웨이다에서 시위 발생 - 바샤르 대통령은 이번 시위에서 체포된 모든 수감자(범죄자는 제외)를 석방할 것이라고 발표 - 미 국무부, 이란의 시위 진압 협력과 관련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
4.15	<p>SNS 등 뉴미디어의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가들이 SNS를 통해 시리아 전역에서 시위를 벌일 것을 촉구
4.19	<p>시리아 정부, 48년 동안 지속된 비상사태법 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리아 정부는 48년간 지속된 비상사태법 해제
4.22	<p>시리아 최대의 유혈사태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리아 최대의 유혈사태 발생, 최소 88명 사망
4.24	<p>사망자 속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사태법 해제 이후, 시위가 더욱 확산, 이틀간 120명 사망 - 의원 2명 사임 - 영국 외교부, 시리아 내 자국민 철수 촉구
4.25	<p>시리아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목소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ICJ, 시리아 사태를 안보리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 - 시리아군, 다라지역 급습, 탱크진압으로 39명 이상 사망, 500여명 체포

일 시	내 용
4.27	EU, 시리아 사태 개입 천명 - EU, 시리아 제재에 모든 수단 강구하겠다고 선언 -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자국 시리아주재 대사 소환
4.28	UN 안보리, 시리아 규탄 성명 무산 - UN 안보리, 중·러의 반대 속에 시리아 규탄 성명 무산
5.3	시리아 정부, 반체제 인사 1천여 명 체포 -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
5.6	저항의 날, 21명 사망 - 600여 명이 시위하다가 부상당하는 등 반정부 시위 지속 및 확산
5.8	시리아 정부, 강경진압 계속 - 미국은 시리아 정부의 강경진압 중지를 요구, 중지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
5.10	EU, 대 시리아 제재 단행 - EU, 시리아 반정부 시위대를 탱크로 강경진압 하는 시리아 정부를 제재하기로 결정, EU회원국 국민의 입국 및 경유 금지, EU 내 자산동결 실시
5.12	시리아 정부, 민간인 거주지에 탱크 발포 - 시리아 중부지역 도시 홈스에서 정부군의 탱크 발포로 최소 민간인 5명 사망 - 정부군 소속의 저격수가 기독교인 1명을 저격하여 숨지게 하면서 종교 갈등을 부추겨 시위 분산 시도
5.16	시리아군, 국경도시 포격 - 탈 칼라크 등 국경도시 4곳을 포격하여 일부 시위대가 레바논으로 탈출하여 사망

일 시	내 용
5.20	<p>시리아군경, 시위대에 발포-44명 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부 이드리트시와 중부 홈스시에서 발생 - 사망자 중 2명은 10대 소년으로 판명
5.25	<p>캐나다, 대 시리아 제재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정부 관리의 시리아 입국 및 여행금지 중단 - 자신 동결 등 경제제재 조치 발표
5.28	<p>다마스쿠스를 비롯 여러 도시에서 유혈시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 다마스쿠스의 카분에서 1500여 명, 중부도시 홈스에서 수 백명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 남부 마을 다엘과 다마스쿠스의 교외 지역에서 8명 이상의 사상자 발생
5.30	<p>시리아 정부군 탱크, 시위대 공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 홈스주의 라스탄과 탈비세흐에 시리아 정부군이 진입하여 탱크 및 중화기로 시위대를 공격하여 최소 10명 이상 사망
6.1	<p>알-아자드 대통령, 정치범 사면 등 유화책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위대의 시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무슬림형제단 등 정치활동이 금지된 조직을 포함한 정치범들의 사면을 명령했다고 시리아 관영통신 SANA가 보도 - 시리아의 집권당인 바스당도 48시간 이내에 전국민과 대화할 수 있는 위원회를 모든 정파를 참가시켜 출범하도록 하겠다고 발표 - 남부도시 다라 인근지역에서 11살 여자 어린이를 포함 민간인 33명 사상 - 야권은 정치범 사면으로 미흡하다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
6.3	<p>시리아 중부 하마에서 5만 명 시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리아 정부군은 소총으로 발포하는 등 시위대를 유혈진압, 관영통신 SANA는 충돌이 없었다고 보도

일 시	내 용
6.5	<p>시위대 장례식장에 10만여 명 운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마에서 있었던 유혈진압으로 죽은 53명의 장례식에 10만여 명 참석 - 장례식 이후 정부의 유혈진압과 퇴진요구를 위한 항의 시위에 대해 정부군이 발포하여 수십 명이 사망
6.6	<p>이스라엘군, 시리아 국경지대 시위대에 발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리아에 거주하던 난민들 포함 반정부 시위대가 시리아-이스라엘 국경지대에서 시위를 벌이며 월경을 시도하자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21명 사망 - 북서부지역 도시 알-수구르, 중부지역 도시 하마 등에서 유혈진압으로 시위대 참가자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
6.7	<p>시리아 군경 120명, 시위대의 매복공격으로 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리아 관영통신 SANA는 시리아 군경이 시위대의 매복공격으로 12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 시리아 인권운동단체인 ‘인권감시소’는 군경과 시위대의 충돌로 군경 8명 포함 38명이 사망했다고 발표
6.8	<p>시리아군, 북부지역으로 진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리아군, 탱크를 앞세워 북부도시 알-수구르로 진격
6.11	<p>시리아군, 알-수구르에서 유혈진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천 명의 시위대가 경찰서를 불태우는 등 군에 맞섰으며, 군은 탱크를 앞세운 발포로 유혈진압 - 시리아 인권단체 ‘인권감시소’는 5대의 헬기가 동원되어 기관총으로 유혈진압했다고 증언 - 터키의 아흐메드 다부토글루 외무장관은 2400명의 시리아 난민이 터키로 월경했으며 적신월사(이슬람지역의 적십자사)가 이들을 위한 두 번째 캠프를 마련중이라고 발표
6.13	<p>시리아군, 알-수구르 탈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리아군이 반정부군 세력에 들어갔던 북부도시 알-수구르를 완전 탈환 - 많은 피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터키로 망명 - 터키 아날돌록통신은 망명자 수가 8500명 이상이라고 보도

일 시	내 용
6.15	<p>시리아군, 반정부 시위대 궤멸작전 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리아군은 반정부 세력 거점 도시였던 알-수구르를 탈환 - 시리아-이라크 국경도시인 북부지역 알-부카말을 포위, 마라트 알-누마라는 다른 북부지역 도시를 향해 진격
6.18	<p>시리아군, 시위대 16명 사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리아군은 무슬림의 금요기도회가 있던 이 날 제2의 도시 알레포 등 여러 도시에서 있었던 시위대에 발포하여 16명 사살 - 영국정부는 시리아 내 자국민들에게 시리아를 떠날 것을 공식 촉구
6.20	<p>반정부세력 규합, “국가위원회” 창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리아 정부와 알-아자드 정권을 반대하는 반정부세력이 연합하여 “국가위원회”를 창설한다고 공식발표 - 자밀 사이브 반정부세력 대변인은 국가위원회 설립 취지가 야당세력이 합심해 혁명을 성원하고 국제사회에 호응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 - 바사드 알-아자드 대통령은 반정부세력의 규합을 비난하면서 개헌의지 천명
6.21	<p>시리아, 친정부 시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 다마스쿠스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친정부 관제 시위 - 친정부 시위대와 반정부 시위대 간의 충돌과 정부군의 대 반정부시위대 발포로 수십 명 사상
6.24	<p>EU, 시리아 강경진압 규탄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정상들이 정례 정상회의에서 시리아 강경진압을 규탄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 - 러시아는 시리아 간섭에 반대하는 뜻을 나타냈지만, 프랑스가 시리아 시위 관련 인사들에 대한 제재 및 경제제재를 제안하여 반영 - 시리아군의 발포로 다마스쿠스 교외의 도시를 비롯한 여러 주 및 도시에서 진행된 시위대 중 수십 명 사상

일 시	내 용
6.27	<p>시리아군 발포로 시위대 3명 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24일 다마스쿠스 교외의 도시에서 있었던 시위대 사망자의 장례식에서 정권 퇴진과 관련한 구호가 나오면서 시위 양상으로 번지자 시리아 정부군이 발포하여 3명이 사망 - 반정부 시위대 유혈진압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레바논과 터키로 망명, 그 수가 각각 수천 명과 1만 2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7.2	<p>30만 명 운집, 최대 시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일 시위 이후 시위대가 날로 확대되어 7월 1일 30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시위 - 중부지역인 하마시에서 30만 명이 넘게 반정부 시위를 벌였으며, 전국 172개 도시에서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천명이 모여 반정부 시위 - 무슬림의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대규모 시위 발생
7.5	<p>하마시에서 3명 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세 소년을 포함한 3명이 하마시의 반정부시위대를 향한 시리아군의 발포로 숨졌다고 ‘(시리아)인권감시소’가 주장 - 다마스쿠스 외곽의 두마르에서는 통신이 끊긴 뒤 군인과 사복경찰이 10대부터 60대 이르기까지 남성들을 체포, 검문소 설치
7.6	<p>시리아군 발포, 시위대 22명 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FP등 주요 외신들은 하마시에서 시위대와 대치중인 시리아군의 발포로 시위대 22명이 사망했다고 보도 - 프랑스와 미국은 이 같은 시리아의 자국민 유혈진압으로 알-아자드 대통령의 통치권에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면서 국제사회의 개입을 호소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반대 입장 표명
7.9	<p>시리아 반정부 시위대 45만명 운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일 시리아주재 미국대사가 하마시의 시위현장에 시위 지지의사를 밝히며 방문한 것에 힘을 얻어 금요기도회를 마친 오늘 45만 명이 시위대로 운집 - 한편, 다마스쿠스시의 친정부 지지자들은 미국대사관에서 하마시 시위현장 방문한 미국대사에 항의 시위

일 시	내 용
7.10	<p>시리아군, 반정부 시위대에 무차별 발포 명령 증언 나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시리아군에서 시위대에 무차별 발포하라는 상관의 명령이 있었다는 8명의 시리아군 탈영병과 4명의 보안요원의 증언을 공개
7.11	<p>시리아 부통령, 다당제 민주주의 필요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루크 알-샤라 부통령은 정부 주도로 열린 ‘국민대화’에서 이례적으로 다당제 민주주의 필요성을 언급 - 유혈진압에 대한 항의로 불참한 야당을 제외한 무소속 의원을 비롯 200여 명이 참여한 ‘국민대화’에서 부통령은 현 사태를 불러 일으킨 자국 정부의 과오를 한편으로 인정하면서도 불법 시위를 주도하는 일부 시위대에 대한 비난도 함께 언급
7.13	<p>미국 백악관, ‘알-아자드 대통령 정당성 잃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과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자국민에 대한 유혈진압 지속으로 ‘알-아자드 대통령은 통치권자로서 정당성을 잃었다’는 표현을 사용 -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직접 알-아자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정당성을 잃었음을 직접 언급하고, 시리아주재 미국대사관을 공격한 시리아 친정부 시위대를 의식한 듯 “그 어느 누구도 우리(미국) 대사관을 공격할 수 없다”고 강력 경고 - 프랑스와 독일도 시리아주재 대사관이 공격 당하여 일부 대사관 직원이 부상당한 것을 거론하며 시리아 사태에 국제사회의 강경대응을 주문
7.15	<p>시리아 시위대, 총파업으로 전략 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 목요일 파업을 벌여왔지만 인명손실을 피하고 정부와 침묵하고 있는 중산층에 대해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 시위대는 총파업을 실시했으며, 오늘 가장 많은 참여를 보임 - 리용남 북한 무역상은 시리아 관영통신 SANA와의 인터뷰에서 시리아의 안보조치를 도울 것이라고 밝힘

4. 예멘 사태 일지(2011.1.27-7.15 현재)

일 시	내 용
2011. 1.27	튀니지·이집트 시위 열기 확산 - 튀니지·이집트 시위 영향으로 살레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
2.2	살레, 퇴진요구 거부 - 살레 대통령, “현 임기(2013년까지) 이후 집권 연장 안할 것” 약속
2.3	‘분노의 날’ 집회 - 대통령 즉각 퇴진 요구 ‘분노의 날’ 대규모 시위
3.1	시위 확대 - 튀니지 및 이집트사태, 예멘으로 확산 - 수도 사나에서 살레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 발생 - 살레 대통령, 시위가 있는 호데이다주 등 5개 주의 주지사 해임
3.10	살레, 개헌안 천명 - 살레 대통령, 권력분립 개헌안의 국민투표 회부 천명, 야권은 거부
3.18	국가 비상사태 선포 - 경찰, 반정부 시위 강경 진압, 52명 사망 - 살레 대통령, 국가 비상사태 선포
3.21	하시드족, 살레 퇴진 요구 - 성직자 및 유력 하시드족, 살레 대통령 퇴진 요구
3.24	시위대와 공화국 수비대 충돌 - 반정부 시위 지지 정규군과 대통령 지지 공화국 수비대 충돌
4.6	충돌의 지속 및 사망자 속출 - 경찰-반정부 시위대 충돌, 25명 사망
4.8	살레, GCC 중재안 거부 - 살레 대통령, 부통령에게 정권이양 골자로 한 걸프협력회의(GCC) 중재안 거부

일 시	내 용
4.21	GCC, 중재안 수정 제시 - GCC, 새로운 중재안인 ‘30일 내 퇴진안’ 다시 제시 - 새 중재안에는 살레 대통령이 30일 내 퇴진하되, 이번 사태와 관련된 책임에서 살레 대통령과 그 일가의 면책특권 허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
4.23	살레, GCC 중재안 수용 - 살레 대통령, GCC 중재안 수용
5.1	살레, 중재안 직접 서명 거부 - 살레 대통령, 대통령 자격으로 서명을 거부하고 여당 대표자격으로 서명할 것이며 그것도 직접 서명이 아닌 보좌관 대리 서명을 할 것이라고 주장 - 중재안 서명식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을 예정인데 살레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직접 이동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는지, 보좌관이 대표 대리로 참석하여 서명하기를 희망 - 야권과 반정부 시위대는 이에 반대 - 결국, 중재안 서명은 무기한 연기
5.5	진지바르시에서 군용차량 폭발, 9명 사망 - 알-카에다 거점도시인 예멘 남부 진지바르시에서 군용차량 폭발로 9명 사망 - 살레 대통령의 중재안 서명 무기한 연기로 인해 반정부 시위가 예멘 전국으로 확산
5.9	야당연합체, 살레 대통령에게 최후 통첩 - 야당연합체인 커먼포럼(Common Forum)은 48시간 이내에 살레 대통령이 서명하도록 최후 통첩
5.12	예멘 곳곳서 반정부 시위 - 수도 사나에서 시위대에게 예멘 정부군의 발포로 14명 이상 사상
5.13	카타르, 예멘 사태 GCC 중재포기 - 예멘정부의 강경진압과 유혈사태 발생에 대해 카타르 정부는 GCC 중재포기 표명. - 살레 대통령은 카타르가 자신의 퇴진을 명기한 중재안에 적극적인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적이 있음.

일 시	내 용
5.20	<p>GCC 중재 불발, 중재단 예멘에서 철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일로 예정되었던 중재안 서명이 불발되면서 예멘에 머물던 GCC 중재단이 철수 - 중재안에 일부 수정이 이루어지면서 예멘 여야가 중재안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살레 대통령이 서명 전에 시위대가 먼저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재 불발
5.23	<p>살레 지지자, UAE 대사관 포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안 서명식 참관을 위해 UAE대사관을 방문했던 미국 대사와 EU대사, GCC사무총장이 예멘군 헬기를 타고 피신
5.25	<p>예멘 부족-정부군 간 교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44명 이상 사상 - 예멘 내 최대 부족인 하시드족이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고, 국영방송사인 SABA를 점거 - 하시드족은 이어 국영항공사 예메니아 본사를 점거
5.26	<p>예멘 부족-정부군 간 충돌로 60여 명 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시드족과 정부군 간의 충돌로 60여 명이 사망 - 살레 대통령은 퇴진을 번복하고 알-카에다를 막기 위해 예멘을 지킬 것이라고 공표
5.27	<p>하시드족, 군기지 장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시드족은 살레 대통령측인 공화국수비대 예하 군 기지를 점령
5.29	<p>예멘군-하시드족, 휴전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전으로 평화 및 안정 기대
5.30	<p>예멘군, 시위대에 발포로 20명 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부 타이즈 자유광장에서 시위하고 있던 시위대에 정부군이 강제해산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시위대가 불응하자 발포

일 시	내 용
5.31	<p>예멘군-하시드족, 휴전 파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시드족이 알-하사바의 관공서를 장악, 알-하사바는 하시드족의 지도자 사디크 알-아흐마르의 자택이 있는 곳으로 이 지역 관공서를 하시드족군이 장악하면서 살레와 충돌 시작
6.3	<p>예멘 대통령궁에 포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시드족군의 대통령궁 포격으로 살레 대통령 목에 부상 - 예멘군은 하시드족의 지도자 동생 2명의 자택과 방송국 등을 공격 - 살레 대통령측이었다가 등을 돌린 알리 모흐센 알-아흐마르 소장의 기갑부대도 예멘군의 공격 대상
6.5	<p>살레 대통령, 치료차 사우디 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레 대통령, 치료차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의 공군기지에 비행기로 도착 - 살레 대통령은 심장 바로 아래 부분에 파편을 맞아 부상당했으며, 머리와 목, 가슴 부분도 상처가 깊음
6.6	<p>예멘군-반정부군 충돌 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레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공적인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도 - 살레 대통령의 예멘 내 부재에도 예멘군과 반정부군의 충돌 지속으로 사상자 발생
6.9	<p>반정부 부족, 2위 도시 타이즈 장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이즈 부족 대표인 셰이크 하무드 사이드 알-마클라피는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고 타이즈를 장악
6.12	<p>예멘군-무장세력 교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멘군과 무장세력이 남부지역인 아비안주 로데르와 진지바르 지역에서 교전하여 40명이 사망 - 예멘 국방부는 이 무장세력을 알-카에다로 추정 판단

일 시	내 용
6.13	<p>예멘군, 알-수구르 지역 탈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멘군이 북부지역 도시인 알-수구르를 탈환 - 경찰제복을 입은 시신 120구의 발견, 이들이 시위대를 지지하기 위해 군대에 저항하다가 죽은 것인지 시위대에게 죽은 것인지 불분명
6.15	<p>알-카에다, 예멘 남부지역 장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멘이 내전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알-카에다가 예멘 남부지역을 공격하여 라히즈주의 주도 후타시에서 정부군과 교전하여 정부기관 및 은행, 라디오방송국 등을 점령 - 알-카에다 세력들은 5.29부터 아비안주 진지바르시도 장악
6.19	<p>예멘 정부군과 알-카에다 교전, 14명 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부 아비안주에서 예멘 정부군과 알-카에다 연계조직이 교전하여 14명이 사망 - 예멘 이슬람 성직자 110명은 성명을 통해 살레 대통령을 추방하고 60일 이내 조기 대통령선거를 요구 - 이 성명에 압둘-마지드 알-진다니를 포함한 다수의 주요 성직자들이 서명
6.20	<p>시위대, ‘대통령 아들인 군사령관이 군사령관직에서 물러나야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멘에서 계속되는 시위대는 아흐메드 살레의 군사령관 퇴진을 촉구 - 살레 대통령이 하시드족의 포격으로 부상을 입어 사우디아라비아로 간 후 실질적으로 국가행정을 장악하고 있는 아흐메드는 시위대 유혈진압을 주도
6.22	<p>살레 대통령, 귀국시기 불투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레 대통령의 부상이 악화되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예멘으로 언제 귀국할지 불투명 - 한편, 예멘 알-카에다는 남부 하드라마우트라주의 알-무칼라 지역 교도소를 습격하여 경비대와 교전을 벌인 뒤 재소자 100명 중 62명을 탈옥시킨 것으로 보도

일 시	내 용
6.23	<p>살레 대통령, 포격이 아닌 폭탄 폭발로 부상 가능성 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정부 부족인 하시드족의 포격으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살레 대통령이 사실은 외부의 공격이 아닌 대통령궁 내부의 폭발로 인한 부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예멘 당국의 1차 조사결과를 AFP 통신이 보도 - 미국 국제안보분석기관인 ‘스트랫포’ 또한 사진판독 결과 지난 9일 발생한 예멘 대통령궁 포격사건에 대해 외부의 공격이기 보다는 내부 공모에 의한 폭탄 공격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
6.24	<p>UN, 예멘에 인권상황 조사단 파견키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비나 샴샤다니 유엔 최고인권대표사무소(OHCHR) 대변인은 약 열흘 동안 예멘에 조사단이 파견되어 예멘의 인권상황을 평가할 것이라고 발표 - UN 안보리는 예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
6.30	<p>예멘 정부군과 알-카에다 간 교전으로 48명 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부 아비얀주 진지바르시의 외곽에 있는 알-와흐디 경기장 인근에서 정부군과 알-카에다 간 교전으로 48명이 사망 - 알-와흐디 경기장은 군이 무기를 공수 받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공군력까지 동원하여 전투 - 민간인 4명이 버스에 숨어 있다 공습으로 인해 사망
7.3	<p>예멘 정부군, 알-카에다 조직에 포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멘군 제25기계화여단은 남부 아비얀주 진지바르시에서 알-카에다 연계조직과 교전 중 2주간 포위된 상태 - 무기 및 병력, 보급품 지원을 정부에 호소 - 알-와흐디 경기장은 결국 알-카에다 손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

일 시	내 용
7.7	<p>살레 대통령, 부상 후 첫 TV출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레 대통령이 부상당한 후 예멘TV에서 처음으로 출연 - 얼굴에 화상 흔적과 팔에 붕대를 감은 모습이었으나 수도 사나의 시민들은 그의 안녕에 대해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허공에 총이나 불꽃놀이용 화약을 쏘는 등 흥분 - 살레 대통령은 TV를 통해서 헌법의 틀 안에서 야당과 권력을 공유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
7.11	<p>살레 대통령, 미국 백악관 대변인과 회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멘 국영TV는 살레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 존 브레넌 백악관 대테러담당과 회동했다고 보도 - 제니 카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브레넌 보좌관이 걸프국가들의 중재로 마련한 권력 이양안에 서명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소개
7.15	<p>예멘 남부 알-카에다 조직 거처 대상 공습당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카에다가 점거하고 있는 예멘 남부 아비얀주의 한 경찰서가 공습당해 5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 - 한 소식통은 미국 무인폭격기가 알-카에다 조직을 공습한 것이라고 했지만 예멘 정부는 자국 전투기가 공습한 것이라며 반박

5. 리비아 사태 일지(2011.2.15-7.15 현재)

일 시	내 용
2011. 2.15-19	리비아 사태 발발 - 리비아 제2도시 벵가지에서 반정부 시위 발생
2.17	‘분노의 날’ 시위 발생 - 페이스북을 통해 ‘분노의 날’ 행사 개최 제안, 이 날의 행사는 2006년 벵가지에서 열렸던 이슬람주의자 집회에서 14명이 숨진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민주화 시위로 전환,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로 사상자 수십 명 발생
2.21	전세계 주재 리비아 대사들의 잇단 사임 - 카다피 정권의 유혈진압에 대한 항의로 전 세계 리비아 대사와 외교관들이 잇따라 사임
2.22	카다피, 정부군에 시위대 진압 지시 - 카다피,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국영TV에 등장, 해외도피설을 부인하고 정부군에 시위대 진압 지시
3.1	리비아 반군의 세력 확장 - 반정부 세력이 리비아 동부 지역 및 서부의 다수 도시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한 가운데 수도인 트리폴리에 대해서는 카다피 정권이 통제력 유지
3.5	리비아 반군, 국가위원회 설립 - 반군이 벵가지에서 대표기구인 국가위원회 설립, 리비아 국민의 유일한 합법적인 대표자처
3.9	카다피가 알-카에다를 시위대 배후로 지목 - 카다피, 반정부 시위대 배후에 알-카에다가 있다고 주장

일 시	내 용
3.10	<p>프랑스, 국가위원회를 리비아의 유일합법정부로 최초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다피 정부군이 수도 트리폴리 인근지역인 자위야에 대한 통제력을 탈환 - 정부군이 세력을 확장하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리비아 반군의 국가위원회를 리비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 - 리비아 반정부의 지도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국가는 프랑스가 처음
3.16	<p>알-이슬람, 반란 48시간 내 진압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다피 정부군이 반군의 근거지인 벵가지 인근까지 진격 - 카다피의 아들이자 리비아 정부의 2인자인 세이프 알-이슬람은 반란이 48시간 내에 진압될 것이라고 주장
3.17	<p>UN 안전보장이사회, 1973호 결의 및 리비아 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리비아 내전에서 UN의 군사적 개입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 채택 - 표결에서 미국·영국·프랑스 등 10개국은 찬성, 중국·러시아·독일 등 5개국은 기권 - 결의 1973호가 “리비아 정부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 민간인과 민간인 밀집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함에 따라 리비아 상공에 비행금지구역 설정 - 카다피군, 벵가지 공습
3.18	<p>카다피, 정전선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한지 하루 만에 리비아 정부, “즉각적인 정전과 모든 군사작전의 중단” 결정 - 그러나 제라르 아로 UN 주재 프랑스 대사가 리비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19일 파리 정상회의 직후 수 시간 내로 대 리비아 군사개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

일 시	내 용
3.19	<p>프랑스, 군사개입 선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비아 정부군의 뱅가지에 대한 공세 강화 속에 파리에서 리비아 사태 논의 위한 주요국 정상회담 개최 -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국제사회의 리비아 군사개입 선언 - 프랑스 전투기의 리비아 영공 진입 후 국제사회의 미사일 공격 시작
3.20	<p>카다피, 반군에 항전의지 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다피, “장기전 준비되어 있다” 다국적군에 대한 항전의지 천명
3.22	<p>리비아 사태 혼란 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적군, 카다피 관저 폭격 - 국제유가 반등 - 리비아의 쿠사 외무장관, UN 안보리 리바오동 의장(중국)에게 “이중잣대” 비난 서한 발송
3.23	<p>EU, 리비아 자산 동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리비아 국영회사 자산 동결
3.27	<p>리비아 반군, 서부 재진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군, 카다피 고향인 시르테 공격 - 다국적군, 시르테 공습
3.30	<p>리비아 반군, 시르테 점령 실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비아 반군, 시르테 점령 지연 - 빈자와르, 라스와누프 점령

일 시	내 용
3.31	NATO군으로 군사지휘권 일원화 - 다국적군의 군사지휘권이 미·영·프 3국 다국적군에서 NATO군으로 이양 및 일원화 완료 - 카다피, “최후까지 리비아에 남을 것” 항전의지 재천명 - 두바이유, 이틀째 가격 급상승 - 리비아 전 외무장관 쿠사, 튀니지 거쳐 영국으로 망명
4.1	카다피측의 내부 혼란 - 카다피측, 내부이탈자 급증 - 리비아 반군, 카다피측에 조건부 정전안 제시
4.3	NATO군의 오폭 - NATO군 전투기, 리비아반군 향해 오폭
4.4	이탈리아, 카다피 지지 철회 - 이탈리아, 리비아 반군의 국가위원회를 유일 합법적 국가로 승인 - 카다피, 리비아 내전의 외교적 해결 용의 피력
4.5	반군 세력 재확장 - 카다피, TV 등장 - 유가, 30개월 중 최고치 경신 - 리비아 정부, 반군에게 정치개혁협상 제안(단, 카다피 거취는 제외) - 반군은 정부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협상 이전에 카다피와 그 일가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 - 리비아 반군, 동부전선 격전
4.6	NATO군과 리비아 반군의 소통 불안 - NATO, 리비아 정부군의 인간방패 작전으로 인한 어려움 토로 - 리비아 전 내무장관이자 반군 사령관인 유니스,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반군은 예외로 인정하여 카다피측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NATO측에 요청

일 시	내 용
4.7	리비아 반군 원유 첫 수출 - 반군이 확보한 아래 원유 첫 수출 - 카다피,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습 중단” 호소 서한
4.8	NATO군, 오폭 또 확인 - NATO군, 리비아 반군에 대한 오폭 사과 거부 - 리비아 반군, 오폭으로 인한 전사자 추도
4.10	카다피, 트리폴리 내 있어 - 카다피, 리비아 국영TV 출연, 존재 과시 - 아프리카연합 중재위, 리비아 분쟁 중단 촉구
4.11	남아공, 리비아 분쟁 중재안 카다피측과 반군에 제안 - 리비아 정부, 새 헌법 제정 추진 - 카다피, 남아공의 리비아 분쟁 중재안 수용
4.12	리비아 반군, 남아공 중재안 거부 - 리비아 반군, 남아공의 중재안 거부 - 카다피가 정치 일선에서 먼저 물러나야한다는 입장 고수
4.13	내전 양상 지속 - 리비아 반군, 카다피측 공격에 반군 및 민간인 1만 명 사망, 2만 명 실종 주장 - 영국·프랑스 외무장관, NATO에 리비아정부군에 대한 공세 강화 주문
4.14	중·러 리비아 군사개입 반대 입장 표명 - BRICS, 싘야선언 “리비아 군사개입 반대” - 리비아 정부, “카타르가 리비아 반군에 무기 제공” 주장

일 시	내 용
4.15	<p>미·영·프, UN 결의를 넘어선 리비아 대응책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결의안 1973호는 카다피의 미래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주민들을 학살하려 한 카다피가 새로운 정부에 참여해서는 카다피에게 저항했던 용감한 시민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에 공감 - 카다피의 딸 아이샤, 끝까지 저항할 것 선언
4.16	<p>오바마, 리비아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바마는 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교전의 교착화와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을 인정, 그러나 NATO군의 대리비아 군사작전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견해를 피력
4.17	<p>미스라타 교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비아 정부군, 반군의 서부 거점지역인 미스라타 포격 - 리비아 반군, 동부의 석유수출항인 브레가 외곽지역 점령
4.18	<p>미스라타 교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비아 정부군-반군 교전으로 미스라타에서 90여명 사상 - 카다피군, 집단성폭행을 무기로 활용
4.19	<p>미스라타 교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주 동안 미스라타에서 1천여 명 사상 - EU, 미스라타에 지상군 투입 검토 - NATO, 리비아 정부군 지휘통제시설에 폭격 감행 - 프랑스, 리비아에 지상군 파견 반대 - 영국, 리비아 반군에 군사고문단 파견
4.20	<p>프·이, 군사고문단 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스라타 내 리비아반군, NATO와 UN에 지상군 파견 공식요청 - 프랑스·이탈리아, 리비아 반군에 군사고문단 파견

일 시	내 용
4.21	<p>NATO, 트리폴리 공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O,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내 군사지휘통제시설 공습 - 리비아 국영TV, NATO의 트리폴리 공습으로 민간인 7명 사망 보도 - NATO는 이에 군사시설만 공습했기 때문에 민간인의 사망은 거짓이라고 일축
4.23	<p>미국에서 리비아 반군 실체 인정 발언 등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존 메케인 상원의원, 리비아 반군을 리비아의 합법적인 대표로 인정해야 하며 미국 내 리비아 동결자산을 반군 측에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
4.25	<p>NATO, 카다피 관저 또 공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호원 및 관저 관리인 등 3명 사망, 45명 부상 - 리비아 반군, 미스라타 내 카다피군 격퇴
4.28	<p>NATO, 세 번째 오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스라타에서 NATO 전투기가 리비아 반군을 리비아 정부군으로 오인 폭격, 40여명 사망
4.29	<p>리비아-튀니지 국경에서 리비아군-튀니지군 교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비아 반군이 튀니지 국경을 넘어 퇴각하자 리비아군이 추격하면서 튀니지 영토 침범 - 이에 튀니지군과 리비아군이 교전
5.1	<p>나토 공습으로 카다피 6째 아들과 손자 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습 당시 카다피도 같은 건물에 있으나 카다피는 생존
5.3	<p>리비아 정부군, 미스라타 포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비아 정부군, 서부 도시 미스라타 포격 - 수도 트리폴리에서는 나토 공습으로 숨진 카다피 아들과 손자에 대한 장례식 거행
5.5	<p>IMO, 리비아 난민 800여명 수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스라타에 IMO(국제해사기구)의 선박이 정박하여 난민 800여 명 탈출

일 시	내 용
5.7	<p>영·프, 리비아 외교관 추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다피측은 IMO가 미스라타에서 난민들을 탈출시키는 것에 대해 항의 -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이 자국 내 동결된 자산을 반군지원기금으로 전환하자 카다피측 반발
5.10	<p>NATO, 트리폴리 공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다피 관저 단지, 정보기관 건물, 리비아 국영방송사 등이 공습의 표적 - 공습으로 어린이 4명이 유리파편으로 부상
5.13	<p>리비아주재 北 대사관, NATO 공습으로 피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비아 주재 北대사관, NATO 공습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대 리비아 NATO 공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
5.14	<p>미국, 리비아 반군의 정부 승인에 대해 아직 이르다고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흐무드 지브릴 반군 대표가 백악관을 방문하여 톰 도널런 국가안전보좌관을 만났으나 미국은 아직 리비아 반군의 정부 승인은 시기상조라는 입장 표명 - 그러나 NATO를 통해 카다피 축출을 지속하기로 합의
5.15	<p>카다피, 명예로운 퇴진 모색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다피가 일왕이나 쿠바의 카스트로처럼 국가의 대부 역할을 유지하면서 명예롭게 권력에서 퇴진하는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보도
5.17	<p>리비아 정부 요인 및 장교들 외국으로 망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비아 정부의 석유장관이 튀니지로 망명 - 리비아 군의 장교 3명도 튀니지로 망명한 것으로 추정
5.19	<p>카다피의 부인과 딸 튀니지에 체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다피의 부인과 딸 등이 튀니지에 체류한 것으로 추정

일 시	내 용
5.21	NATO군, 리비아군 공습 - NATO군, 리비아군 함정을 공습하여 8척 격침 - NATO군, 리비아군사령부 공습 - 아프리카연합(AU)의 의회인 ‘범아프리카의회’는 NATO군의 광범위한 작전을 비난
5.23	시위대의 시위 지속 - 계속된 시위와 리비아정부군의 유혈진압으로 사망자 속출
5.24	리비아 반군, 미국에 대표부 설치 - 미국의 요청에 따라 리비아 반군이 워싱턴에 대표부 설치 결정
5.25	NATO군, 카다피 관저 맹폭 - 리비아 국영TV는 민간인 지역에 NATO군이 공습하여 민간인들이 사상당했다고 주장했으나 NATO군은 공습은 군사시설에 한정되었다고 일축
5.26	리비아 정부, 카다피 퇴진 가능성 시사 - 칼레드 카입 리비아 외무장관은 영국 텔레그래프TV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정치적 선택지를 검토할 것’임을 처음으로 시사
5.27	리비아 정부, 정전 제안 - 알 마흐무디 리비아 총리는 반군의 대표기구인 ‘국가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리비아인들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
5.28	NATO, 카다피의 관저 폭격 - NATO군이 알-아지지야에 있는 카다피의 관저를 폭격 -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 카다피의 퇴진이 리비아에 유익할 것이라 조언

일 시	내 용
5.30	<p>리비아 반군, 원유생산 중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비아 반군, 유전 안전 확보할 때까지 원유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발표 - 주리비아 한국대사관은 트리폴리에서 튀니지 수도 제르바로 임시이전
5.31	<p>남아공 대통령, 리비아 사태 중재 위해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이콥 주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리비아 사태 중재를 위해 방문하여 카다피와 회담 - 제이콥 주마 대통령은 카다피가 휴전을 수용할 용의가 있으며 사태 해결을 위해 리비아인들끼리 대화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견해 표명 - 한편, 외신들은 리비아군 장교 120명이 이탈리아 로마 등 국외로 탈출했다고 보도
6.1	<p>NATO, 리비아 군사작전 기한 90일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비아 사태 해결을 위해 NATO군은 군사작전 기한을 90일 연장한다고 발표
6.2	<p>리비아 석유장관, 카다피측에서 이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크리 가넴 리비아 석유장관이 반정부 세력에 합류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이탈리아 뉴스통신 ANSA가 보도 - 리비아 석유장관은 6.8 예정된 석유수출기구(OPEC)에 리비아 대표로 자신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가위원회에 참여할지는 유보적인 태도 표명
6.7	<p>중·러 리비아 정부측과 반군측 모두 접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뱅가지에서 리비아 반군과 접촉, 또한 리비아 정부의 알-오베이디 특사가 중국을 방문하여 접촉할 예정 - 중국은 리비아 사태 직후부터 개입에 소극적이었지만 사태의 장기화로 리비아 사태와 관련한 양측을 모두 접촉하기 시작 - 러시아도 특사를 뱅가지로 보내 리비아 반군과 접촉 - 한편, 리비아 반군이 카다피를 옹호하는 요르단 국적의 민간인을 고문치사한 정황을 휴먼라이츠워치(HRW)가 포착하였다고 주장

일 시	내 용
6.8	<p>카다피, “물러나지 않을 것”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O군이 카다피의 관저인 알-아지지야를 맹폭 - 카다피는 국영TV에 육성녹음으로 등장하여 NATO 및 서방을 비난함과 동시에 퇴진요구를 거부 - EU, 리비아 정부측이 장악하고 있는 6개 항만을 제재리스트에 포함하기로 결의
6.9	<p>리비아군, 미스라타 맹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비아 반군 대변인은 리비아 정부군이 반군의 장악 지역인 미스라타를 맹공하여 1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다고 발표 - 한편, 뱃가지를 방문한 스페인 트리니다드 히메네스 외무장관은 리비아 반군인 ‘국가위원회’를 리비아의 유일합법정부로 승인한다고 공식발표 - 리비아 연락그룹회의에서 ‘포스트 카다피 리비아 체제’에 대한 논의 시작
6.13	<p>리비아 반군, 수도 트리폴리 인근 자위야 서부까지 진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비아군은 서방기자들에게 자위야 동부를 보여주며 반군의 주장을 반박 - UAE는 리비아반군 ‘국가위원회’를 리비아의 유일합법정부로 공식 승인
6.15	<p>캐나다, 리비아 반군을 합법적인 대표로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 베어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의회에서 리비아 반군을 리비아의 합법적인 대표로 승인한다고 발표 - 또한 캐나다 의회는 6월 말로 종료되는 군사작전 시한을 3개월 반 연장하는 것을 의결
6.16	<p>리비아 반군, 서부 거점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비아 반군이 수도 트리폴리로 연결되는 서부 산악지역을 확보하여 서부전선의 거점 장악 - 리비아 반군은 15일 트리폴리 서쪽 요충지인 예프레과 진탄 사이 자위트바굴과 라와니아, 가님마에서 리비아 정부군을 축출

일 시	내 용
6.17	<p>카다피 아들, 국제감시단 참관 선거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다피의 아들인 사이프 알-이슬람은 카다피 원수가 국제감시단 참관 아래 선거가 진행되는 것을 동의할 것이라 밝혔다고 이탈리아 유력 일간지인 코리에레 델라 세리에가 보도 - 또한 카다피의 망명설을 부인하며 선거를 실시하면 대다수의 리비아인들은 카다피를 지지할 것이며 패하더라도 리비아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라고 주장
6.18	<p>카다피 TV 육성 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다피는 17일 국영TV에 모습을 드러내 NATO군을 패퇴시킬 것이라 주장
6.20	<p>NATO, 리비아 민간인 오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O, 전투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오폭이 있을 가능성 시인
6.21	<p>EU, 리비아 자산 동결 활용하여 반군에게 재정지원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회원국가 내 리비아 자산을 동결한 EU가 그 자산을 활용하여 반군에게 재정지원을 고려 - EU가 리비아 동결 자산을 담보물로 취급하고 반군에게 대출금 성격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고려
6.27	<p>리비아 반군, 수도 트리폴리 남서쪽 80km까지 진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비아의 나푸사 산맥에서 수주 간 정부군과 격전을 벌인 반군은 반군이 나푸사 산맥을 넘어 트리폴리에서 남서쪽으로 80km 떨어진 비르 알-가남까지 진격 - 전세가 반군이 유리한 쪽으로 전개되자 정부군에서 이탈하는 병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도 - 리비아 축구 국가대표 선수단에서도 선수 17명이 이탈하여 튀니지를 통해 반군 거점지역으로 들어가 반군 지지표명 - 국제형사재판소는 카다피 원수와 차남 사이프 알-이슬람 카다피 군사령관, 친척 압둘라 알-세누시 군정보국장에게 반인류범죄 혐의를 인정해 체포영장을 발부

일 시	내 용
6.30	<p>프랑스, 리비아 반군에게 무기 지원 공식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정부는 리비아 반군에게 식료품과 물 같은 보급품과 함께 소총이나 폭탄같은 것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통해 전달했다고 공식 확인 - 영국 정부는 프랑스를 따라 하지 않겠다며 무기 지원 여부의 확인 거부
7.4	<p>리비아 반군, 카다피 퇴진 하면 리비아 내 거주 허용할 의사 피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비아 반군의 국가위원회는 카다피가 권좌에서 퇴진하고 리비아 내에서 머물기를 원한다면 국제적인 감시 아래 거주를 허락할 의사 표명
7.5	<p>카다피측, 반군과 협상 진전 있었으나 NATO가 방해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다피측은 반군과 협상이 진전 있었으나 NATO가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군은 정부측과 직·간접적인 대화를 부인 - NATO 또한 방해했던 적이 없다고 부인
7.6	<p>러 신문, 카다피 자진 사퇴 동의 밝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유력지 코메르산트는 자신의 신변 안전 보장과 아들의 선거 참여 허용을 조건으로 자진 사퇴에 동의했다고 보도 - 그러나 리비아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 - 세계식량계획(WFP)는 리비아 수만 명 식량부족이 심각하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
7.9	<p>카다피, “리비아인 수백 명 유럽에서 순교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다피는 NATO의 공격이 잘못된 것이라며 수백 명의 리비아인이 유럽에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시사 - 유럽 지역 내에서 테러를 암시하는 것으로 유추 가능
7.11	<p>리비아 반군, 친정부군 원유 공급 차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비아 반군이 친정부군으로 유입되는 석유 송유관 밸브를 차단했다고 확인

일 시	내 용
7.13	<p>프랑스 총리, 리비아 정치적 해결 가능성 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용 프랑스 총리는 카다피가 프랑스와 터키, 미국 등 여러 나라에 특사를 보내 자진사퇴의 뜻을 밝혔다고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확인 - 리비아 반군이 서부 나푸사 산맥을 점령하고 정부기관으로 공급되는 송유관을 장악하여 밸브를 차단, 한달 내에 카다피측은 석유공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7.15	<p>국제사회, 리비아 반군을 리비아의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을 비롯한 리비아 사태 관련국 모임 ‘연락그룹’을 포함한 NATO 30여 회원국은 이 자리에서 리비아 반군의 ‘국가위원회’를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하고 카다피와 일가 친척들은 권좌에서 떠날 것을 요구

(정리: 손광수 연구인턴)

연구총서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운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곤, 구기보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	9,000원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근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 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외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에 대한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김규륜 외	13,000원

학술회의총서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협동연구총서

2008-07-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 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 (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제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율 외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8,000원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오 외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총괄보고서)	김국인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근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총괄보고서)	여인근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향	민병원 외	7,5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2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i>	이금순 외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기타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2010	통일 환경 평가(통일대계 연구 2010-01)	박종철 외	18,000원
2010	통일비전 개발(통일대계 연구 2010-02)	조민 외	12,000원
2010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통일대계 연구 2010-03)	황병덕 외	16,000원
2010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중심(통일대계 연구 2010-04)	황병덕 외	15,000원
2010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통일대계 연구 2010-05)	배정호 편저	11,000원

2010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대계 연구 2010-06)	최진욱 편저	11,000원
2010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통일대계 연구 2010-07)	최진욱 편저	13,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6,000원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아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헌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2009-02(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적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에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 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2호	이금순, 김수암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월간 북한동향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6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6호	북한연구센터

Studies Series

-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Cheon Seong-Whun
-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P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wook, Lee Kyo-Duk, Cho Jeong-Ah, Lee Jin-Yeong, Cha Moon-Seok
-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기타

-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 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INU 정책연구시리즈 11-01

재스민 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통일연구원

